

국회보

Since 1949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Vol. 659



2021. 10

높이다



다이내믹, 의정

국회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국회보

2021 October vol.659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1975-7581

발행일 2021년 10월 1일

발행인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국회홍보출판위원회

전상수 위원장(입법차장)

지동하 위원(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위원(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위원(법제실장)

유상조 위원(의정연수원장)

한웅현 위원(문화소통기획관)

이복우 위원(공보기획관)

현은희 위원(국회도서관 정보봉사국장)

강준희 간사(문화소통담당관)

국회보편집실무위원회

제방훈(보좌관), 한주연(비서관), 하상우(서기관)

편집실무진

글 김현아(취재보도사무관), 고영선, 박민선, 윤성혜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문화공감 02)2266-1897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표지 이야기

국회는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좋은 세상을 꿈꿉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국회가 되겠습니다.

04 지금 국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
국회, 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
국민통합위, 결과보고서 및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 채택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법률안 39건 의결
박병석 국회의장 정기국회 개회사

특집 _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정책 방향

- 26 한발 늦은 플랫폼 산업 규제, 소상공인의 고통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_ 송유경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공감대 바탕으로 규제
도입 필요 _ 박성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해야 _ 송상민
정보통신강국의 철학과 비전 담은 온라인 플랫폼
법제 필요 _ 김재철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_ 정혜련
온라인 플랫폼 관련 국회 입법 동향 _ 송민경·강재구
- 38 상임위 여야 간사에게 듣는다
“정쟁이 아닌 정책의 장이 되는 정기국회 이끌 터”
_ 한병도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국민과 함께하는 유연한 정치 되도록 노력할 것”
_ 추경호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 42 길에서 길을 찾다 _ 장철민 의원
원도심 활성화로 새바람 부는 대전 동구
- 46 칭찬합시다 _ 용혜인 의원
“정치는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만드는 일”
- 48 의원의 좌우명 _ 이웅선 의원
‘초지일관’
- 50 나의 인생 나의 정치 _ 이영 의원
“동시대를 사는 이들의 가슴속에 기억되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
- 52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사업장폐기물 국가책임제, 게임 섯다운제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 60 새 법률 소개
국회 본회의,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의결
- 70 법률 시대를 읽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_ 고상근

72 국회 주재관 리포트

2021 러시아 총선 관전기 _ 류승우

75 국회의 풀꽃과 나무 이야기

‘수크령’

76 기고

국회 간행물의 심미성·통일성 확보 위한 표준 디자인 개발
_ 최은제

78 법 시행 그 후

침체된 화훼산업을 살리는 법

80 만화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82 위원회는 지금

국회, 아프간 평화정착 결의안 의결 및 대법관 청문회 등 개최

85 국회 뉴스

92 국회 사람들

“국회와 언론 사이의 소통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

94 이달의 서평

정의 중독 _ 현명호

96 새로 읽는 중앙아시아사

아프가니스탄 바미얀 불교 유적을 조성한 에프탈 왕국
_ 이광태

100 바이러스의 역사

신보수주의 시대를 연 ‘에이즈(AIDS)’ _ 도현신

102 수목원 탐방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106 국회 미술관

권기수의 퓨전 한국화와 ‘동구리’의 시공간 _ 김준기

109 속기록으로 본 이달의 의정사

국회의사당이 남산에? _ 손숙자

110 오천 년의 숨결, 우리 유물을 찾아서

8세기 경주, 그 파격의 상징 ... 다보탑과 석가탑 _ 이광표

114 대한민국 문학기행

가을보다 아름다운 문장, ‘메밀꽃 필 무렵’ _ 장태동

118 생활 속 우리말글

의미나 대상이 같을 때는 용어도 같아야 한다 _ 김형주

119 정치 관련 주요 일지

박병석 국회의장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

24개국 의회 지도자와 릴레이 양자회담 … 의회 정상 외교 총력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 박병석 국회의장이 9월 7일 '논제2: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글로벌 대응은 다자주의의 성과 달성 역량에 도전을 제기한다'를 주제로 한 일반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9월 4일부터 10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5박 7일간 빈에 머무르며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을 포함해 24개국 의회 지도자들과 회담을 갖는 등 숨가쁜 의회 정상 외교를

펼쳤다.

세계국회의장회의는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 주최로 5년마다 열리는 의회 정상 회의다. 이번에 열린 5차 회의는 지난해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년 늦춰 개최됐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박병석 국회의장

다. 5차 회의에는 IPU 회원국 179개국 가운데 115개국이 참여했으며, 국회의장 80여 명을 포함해 110명이 넘는 세계 의회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열린 첫 대규모 국가 지도자급 회의다.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의 국제무대 위상이 높아진 만큼 회담장에서는 박 의장에게 양자회담 요청이 이어졌다. 박 의장은 예정된 일정 외에도 이 같은 즉석 회담 요청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의회 정상 외교에 힘을 쏟았다. 이는 행정부 외교와 의회 외교가 씨줄과 날줄처럼 엮일 때, 비로소 외교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박 의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릴레이 양자회담을 통해 박 의장은 각국 의장들과 국가별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 협력, 남북평화 정착과

한반도 비핵화, 코로나19 공동 대응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오스트리아 하원의장과 회담

박병석 국회의장은 9월 5일 저녁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한 호텔에서 동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의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6일에는 오스트리아 의회도서관에서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박 의장과 소보트카 하원의장은 과학기술 선도국이자 유럽 문화·예술의 중심인 오스트리아와 정보통신기술(ICT)·수소산업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증진



- ① 박병석 국회의장이 9월 6일 빈 의회도서관에서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
- ② 마틴 춘공 IPU 사무총장과 회담
- ③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송석준·송기현 의원(왼쪽부터)이 브영 딩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 일행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④ 토마슈 그로즈키 폴란드 상원의장과 회담

과 문화·예술 및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오스트리아의 기초과학·기술력이 한국의 상용화·산업화 능력과 접목될 수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 DNA(Digital-Network-AI), 전기차, 수소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과 소보트카 하원의장은 수교 130주년을 맞는 내년에 소보트카 의장이 한국을 방문해 양국 의회 간 협

력의정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박병석 의장은 또 “나는 장소 등 조건 없는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했다”며 “미소 정상회담처럼 남북 국회회담도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IPU 사무총장, 베트남 국회의장, 폴란드 상원의장,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장 등과 회담**

박병석 의장은 7일 오스트리아센터에서 열린 제5

차 세계국회의장회의 개최식에 참석했다. 개최식 직후 박 의장은 마틴 춘공 IPU 사무총장과 별도로 면담시간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IPU의 중재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북한이 비록 이번에 오지 못했지만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한 IPU에 감사드린다”며 “나는 언제 어디서든 허심탄회하게 남북 국회회담을 할 것을 제안했다. 백신뿐 아니라 인도적 식량 지원 문제까지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춘공 총장은 “의장님의 평화 의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메시지가 있으면 나에게 전달해달라. 의장님의 뜻을 북한에 잘 전달하겠습니다”고 화답했다.

개회식이 끝난 뒤 박 의장은 브영 딩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담에서 후에 의장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되길 희망한다”고 하자 박 의장은 적극 공감을 표했다. 박 의장과 후에 의장은 양자회담 후 별도로 비공개 회담을 갖고 외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토마슈 그로즈키 폴란드 상원의장과도 회담을 열어 폴란드 신공항 건설과 원전사업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협의했고, 의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의장 공식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폴란드 신공항 건설에 인천공항공사가 전략적 자문사로 선정되었는데 한국 기업들이 참여

를 희망하고 있다”며 그로즈키 의장의 관심과 성원을 요청했다. 또 “한국은 24개 원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UAE)에 4개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 기업이 폴란드 원전 사업 참여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로즈키 의장은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 프랑스, 한국의 3파전”이라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의회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 기술적 문제와 안정성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사히바 가파로바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장과 회담을 열고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올해 안에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파로바 의장이 박 의장에게 연내 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며, 박 의장은 “공동의장국인 한국과 러시아가 협의해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사크르 고바시 UAE 연방평의회 의장과도 만났다. 고바시 의장은 올해 10월 개최되는 2020 두바이 엑스포에 박 의장을 초청했다.

이 밖에도 박 의장은 무스타파 센톱 터키 국회의장, 파우지아 빈트 압둘라 자이날 바레인 하원의장, 탈란트 마미토프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 등과도 만나 박 의장의 순방 이후 의회 정상 간 교류 협력을 이어가자는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주고받았다. 박 의장은 에디트 이스트렐라 포르투갈 국회부의장과도 만났다.

박병석 의장,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우리 입장 밝혀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논제2: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글로벌 대응은 다자주의의 성과 달



- ① 사히바 가파로바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장과 회담
 ② 사크르 고바시 UAE 연방평의회 의장과 회담
 ③ 누를란 니그마툴린 카자흐스탄 하원의장과 회담. 박병석 의장(오른쪽에서 세번째)과 송기헌 의원, 송석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
 ④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 회담

성 역량에 도전을 제기한다를 주제로 한 일반토론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해 발언했다.

토론에서 박 의장은 “대한민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용적 다자협력에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제법 규범과 다자주의 원칙에 따라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장은 “다자주의 원칙에 따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대와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고, 전 세계 백신 공급량을 확대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보건위기에 앞장서서 대응하겠다”고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다짐했다.



얀 안토니 브라윈 네덜란드 상원의장과 회담



검버자브 잔당샤타르 몽골 국회의장과 회담

카자흐스탄·인도네시아·네덜란드 의장 등과 회담

박 의장은 토론 뒤에도 의회 지도자 간 연쇄회담을 가졌다. 박 의장은 누를란 니그마툴린 카자흐스탄 하원의장과의 회담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정중히 송환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고, 니그마툴린 의장은 박 의장에게 카자흐스탄 방문을 공식 초청했다.

박 의장은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의 회담을 열어 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양국 의회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얀 안토니 브라윈 네덜란드 상원의장과도 양자회담을 했다. 회담에서 박 의장은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양국 의회가 상호 교류를 확대해 두 나라 관계를 증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자”고 말했다.

몽골 국회의장과 회담·오스트리아 국영방송과 인터뷰

박 의장은 오스트리아센터 인근의 멜리아호텔에서 검버자브 잔당샤타르 몽골 국회의장과도 회담을 하고

신북방정책에 따른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의장은 “몽골은 한국의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며 “작년은 양국 수교 30주년으로 그동안 양국 간 경제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는데 앞으로도 발전을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잔당샤타르 의장은 “신북방정책은 동북아 국가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지한다”며 “인프라, 에너지, 로지스틱 분야에서 동북아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장은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일반토론에 앞서 오스트리아 국영방송 ORF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의장은 남북한 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고 “우리는 북한과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원하는 것이지 흡수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국제회의에 북한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병석 의장은 오스트리아 하원 주최로 호프부르크궁에서 열린 공식 리셉션에 참석해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 로베르토 피코



로베르토 피코 이탈리아 하원의장과 회담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회동

이탈리아 하원의장과 각각 즉석회담을 했다.

박 의장은 마트비엔코 의장에게 올해 12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유라시아 여성의원 포럼에 우리나라 여성의원 참가와 관련해 마트비엔코 의장과 의견을 교환했다. 피코 의장과의 만남에서 박 의장은 G20의 의장 회의인 P20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아일랜드 상원의장 등과 회담

박 의장은 8일 오스트리아 빈 임페리얼 호텔에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과 만나 국제 외교 현안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박 의장과 반 전 총장은 국격에 맞는 외교를 위해서는 외교예산이 나라의 1년 예산의 1%는 돼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했다.

박 의장은 이날도 세계 각국의 의장들과 의회 정상 외교를 이어갔다.

박 의장은 마크 데일리 아일랜드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의장은 “아일랜드의 최대 시민단체인 ‘컨선(concern)’이 1997년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 농업, 식수 위생 사업 등을 해왔는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데일리 상원의장은 “컨선은 지금도 활동 중이며, 아일랜드 정부도 이들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서로의 국가에 공식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며 회담을 마쳤다.

박 의장은 이어 옴 비를라 인도 하원의장을 만나 방위산업과 소프트웨어 협력 증진에 대해 논의했다. 박 의장은 “인도는 우리나라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이고, 모디 총리가 추진하는 신동방정책과의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를라 하원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민주주의를 위해 상호교류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며 양국 의



마크 데일리 아일랜드 상원의장과 회담



스테파니 도스 벨기에 상원의장, 엘리안느 킬리우 벨기에 하원의장과 회담

회 교류의 의지를 표명했다. 또 “한국은 하이테크 기술력이 높은 나라로, 한국과 기술적·인적 자원 교류를 확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스테파니 도스 벨기에 상원의장과 엘리안느 킬리우 벨기에 하원의장도 함께 만났다.

박 의장은 “벨기에는 한국전 참전국이며, 우리의 전통 우방인데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이 확대되는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스 상원의장은 “양자 간 경제 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교는 물론 경제적 협력도 더 강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장은 알렌 시모난 아르메니아 의장을 만났다.

릴레이 회담 후 폐막식에 참석한 박 의장은 에스페란사 라우린다 니우아니 비아스 모잠비크 국회의장, 하나피 알리 기발리 이집트 하원의장, 아나 마리아 마리 마차도 쿠바 부의장과 각각 회담을 갖고 의회 교류 증진 등 협력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박병석 의장 기자간담회 열고 의회 외교 중요성 강조

박 의장은 9일 의원단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회의의 성과와 소회를 밝혔다. 박 의장은 “정부 외교와 의회 외교는 옷감의 씨줄과 날줄과도 같다. 연속성을 담보하려면 의원 외교를 의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나라별 핵심 프로젝트와 관련된 구체적 얘기가 오갔다”며 “이번 회담은 단순 선언 차원 아니라 구체적 경험 단계까지 갔다”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또 “각국 의장들에게 남북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 설명했다”면서 “특히 러시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국가는 남북 공동 수교 중이라서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인 만큼 우리 의지를 확고히 전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

국회, 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



박병석 국회의장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는 8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공석이었던 국회부의장에 국민의힘 최다선(5선) 의원인 정진석 의원을 선출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전체 245표 중 231표를 얻었다. 정 부의장은 “의회민주주의는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와 타협이다. 지각 합류한 만큼 더 책임감을 느끼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제21대국회 개원 1년 3개월 만에 국회 의장단 구성이 완료됐다.

국회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왔던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7개 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으로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국회는 또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출 이후 공석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도 선출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 외에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여당 3명, 야당 7명 등 총 10명이다.

당선 소감



정진석 국회의장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결 만능주의가 아닙니다.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국회의장단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지각 합류를 한 만큼 더 열심히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겠다고 다짐을 드립니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의 눈높이를, 법사위의 시계를 국민의 삶에 맞추겠습니다. 민생개혁법안의 처리가 늦어지거나 또 오랫동안 잠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옥 정부위원장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위원회는 국민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현안들이 가장 많은 상임위입니다. 여야 위원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겠습니다. 역지사지하겠습니다.”



조해진 교육위원장

“아이들에게 희망의 사다리, 꿈의 사다리를 이어주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교육 현장, 교육체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재 외교통일위원장

“내치는 우리가 좀 격렬하게 갈등이 있더라도 적어도 외교와 안보, 한반도 평화 문제는 가급적 같은 목소리와 같은 전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문화예술인, 체육인, 관광업 종사자분들이 하루빨리 훌훌 털고 일어서실 수 있도록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태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우리 농촌과 어촌의 10년 후의, 20년 후의 미래를 중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그런 설계를 하는 상임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대출 환경노동위원장

“선진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그런 환경·노동 현안들,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승 국토교통위원장

“국토위는 국민 여러분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민생경제 상임위입니다. 여야가 정책을 지양하고 서로 협치해서 운영하는 모범적인 상임위로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송옥주 여성가족위원장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우선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면서 나라 발전과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여야 원만한, 또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국민통합위, 결과보고서 및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 채택



9월 15일 열린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 가운데)과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9월 15일 제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위원들이 참석했다.

제7차 전체회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회의로, 분과위원장 3인이 그동안의 활동 경과와 제언을 정리해 발표했으며, 이후 위원 간 토론을 거쳐 최종 결과보고서를 확정했다.

정치분과, “헌정특위 구성해 시일 내에 개헌안 합의 국민투표에 부의” 제언

먼저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이 정치분과의 활동 경과와 제언을 발표했다. 정치분과는 “현행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및 의회·선거·정당 제도가 구조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헌정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른 시일

내에 권력구조 개편 및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해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촉구했다.

경제분과, “여야가 합의 가능한 경제 관계 계류법안 조속 처리” 제언

다음으로는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이 경제분과의 활동 경과와 제언을 발표했다. 경제분과는 양극화 해소·경제혁신 및 경제활력 제고·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통한 우리 경제의 질적인 도약과 국민통합을 구현하기 위해 부동산·노동·사회안전망·규제·혁신성장·교육·공정경제·동반성장·재정 분야의 9대 과제를 제시하며, “각 과제를 통합·일괄타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 타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회 계류 중인 경제 관계 법안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국회의장 소속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분과, “사회 갈등 해소 위해 노동·복지·혁신의 복합 해법과 여야 연합정치 추진” 제언

마지막으로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이 사회분과의 활동 경과와 제언을 발표했다. 사회분과는 “다차원적 갈등과 디지털 격차 등 새로운 유형의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갈등이 증폭되고 진영대립과 국

민분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의 유연안정성의 제고와 차별해소·격차완화의 지향, 소득기반 전 국민 사회보험과 같은 노동·복지·혁신의 복합 해법과 대승적 차원의 여야 연합정치와 같은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각 분과위원장의 발표 후 통합위원들 간의 의견교환을 거쳐 결과보고서와 이를 요약한 제언집을 최종 확정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국민통합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내는 성과를 거두기까지 논의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월 신년인사를 통해 사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고자 국민통합위원회 구성을 제시했고, 이어 지난 2월 총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면서 국회국민통합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정치·경제·사회의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을 도출해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결과보고서’ 및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을 채택했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채택한 결과보고서와 제언집을 책자로 발간해 배부할 계획이다.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법률안 39건 의결



국회는 9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39건을 비롯해 총 4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2021년 예산으로 반영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활용해 국회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설립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회 운영 비효율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담았다.

또 K-반도체 산업의 전자응용설비 운용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 등 미래산업 활

성화 법안,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형사사법절차 전반의 전자화로 형사소송 등 기록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2018년 12월에 진행된 OECD 뇌물방지협약 4단계 이행평가에서 대한민국에 제시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 조성 규정을 신설해 지역별로 통일센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

“‘대선 전초기지’ 아닌 3민 국회를”

(민생경제·국민안전·민생미래)

박병석 국회의장 정기국회 개회사



박병석 국회의장이 9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장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21대국회의 두 번째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정기국회지만,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어느 때와는 다릅니다. 지금의 상황이 엄중함을 모두가 절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최근 보도된 사진 한 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폐업한 음식점에서 나온 냉장고와 싱크대, 고깃집의 원통형 양철 의자 같은 주방기구가 고물상 마당에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견디고 견디던, 버티고 버티던 음식점 사장님들이 벼랑 끝에 몰려 고물상 문을 두드리고 '눈물의 폐업'을 하고 있는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끝 모를 코로나 대유행과 '생업현장의 눈물'...오로지 민생 국회 돼야

비상한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의 삶이 2년 가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절박한 위기입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여기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에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국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과 회복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실사구시 정신으로 국회가 위기의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박한 민생을 돕는 일에 다행히도 여야가 손을 잡았습니다. 개원 1년여 동안 우리 국회는 여

야 합의로 다섯 차례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극복 등을 위한 예산안을 법정 제한을 지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분명, 소중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버팀목 하나로는 견뎌낼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상황입니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청년실업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을 튼튼히 세우는 데 여야가 손을 잡아야 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국민이 어려울 때 국회가 언덕이 돼야... 정부예산안 제때 처리를

국민이 어려울 때 국회는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돼야 합니다. 모든 판단과 결심의 기준은 '국민'이 돼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합니다.

내년 예산은 새 정부 임기 첫해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당리당락을 떠나 국민을 위한 '중립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예산도 제때에 쓰여야 약효가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꼼꼼히 따지되,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법정 시한 내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킵시다.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여야 합의로 통과하는 것을 제21대국회의 확고한 전통으로 정착시켜 나갑시다. 그러면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도 한결 달라질 것입니다.

법안심사는 균형 있게 합시다. 국민의 생업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법안이 되레 국민의 자유에 부담을 주어서 안 되겠습니다. 새로운 법안이 규제의 담장을 더 높이 쌓는 일이 없는지 전후좌우를 면밀히 살펴봅시다.

대통령 선거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야의 대선후보가 정기국회 기간 중 가려질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대선 전초기지로 각 정당의 첨예한 격전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켜 국민통합을 어렵게 하는 정쟁의 장이 될까 우려합니다.

여의도의 상식에서 국민의 상식으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이런 우려와 통념, 시원하게 깨봅시다. 여의도의 상식을 깨고, 국민의 상식으로 돌아갑시다.

정기국회 100일은 헌법이 명령한 국회의 시간입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100일이 되어야 합니다. 대선 국면이기에 바위처럼 단단하게 중심을 잡는 국회가

됩니다.

불가피한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민생경제가 입은 타격은 너무도 엄중합니다. 방역과 민생경제는 궤를 달리할 수 없는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촘촘한 방역과 빠른 집중으로 민생경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백신주권이 곧 국력... 백신확보와 개발에 국회지원 긴요

국민안전과 민생경제를 위해선 백신주권 확보가 당면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백신주권이 바로 국력인 시대입니다. 충분한 백신 확보는 물론 국산 백신 개발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가 온힘을 다해 지원합시다.

백신주권을 확보해야만 격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발 앞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신 개발 예산을 뒷받침하고 관련 제도도 손질합시다. 신속한 백신주권 확보를 뒷받침 하는 ‘국민 안전’ 정기국회를 만듭시다.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제로 구현, 녹색경제와 디지털 사회의 접목, 계층·진영 간 갈등극복을 위한 국민통합,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국가 대전략에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국정과제지만 우리 정치는 눈앞의 현안에 묻혀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전면화 되고 있습니다. 국제 공급망이 허물어지



9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

기 시작했고 탈(脫)동조화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낯선 미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제질서의 변화에 한반도 좌표를 제대로 설정해야 합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교훈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

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주국방’과 ‘초당적 외교’, ‘전략 외교’에 대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혜를 모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합시다.

안보가 민생입니다. 여·야가 아닌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의 책무입니다. 한발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국가만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대전략, 국회의장 직속기구서 청사진 준비중

5년 단임의 행정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긴 안목을 갖고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국회가 미래 민생을 향한 밝은 등불을 제시해야 합니다. 비상한 시국이지만 우리 국민을 지켜내면서 다음 세대의 먹거리 창출이라는, 미래 청사진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국가중장기어젠다위원회’와 ‘국민통합위원회’를 두고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5년 단임의 정부를 뛰어넘는 국가전략을 다듬고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가 9개월간의 활동을 정리 중입니다. 가까운 시일에 국민 여러분께 ‘한반도 경영의 미래 청사진’을 보고드릴 것입니다. 여야 지도부, 각 당의 대선 후보들과 토론하는 기회도 가질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에서 일 잘하는 국회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21대국회가 출범하면서 우리는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국회가 언제든지 열릴 수 있도록 상시국회를 표방했습니다. ‘일하는 국회’가 정착돼가고 있습니다.

제21대국회는 오늘까지 2천774건의 법안을 처리했

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의 제20대국회보다 96% 늘었습니다. 처리율도 제20대국회와 비교했을 때 6.8%포인트 증가한 23.1%에 이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비대면 영상회의 제도도 갖춰놓았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법안심사와 표결이 가능합니다. 국회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작동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의 기틀을 마련했으니 이제 일 잘하는 국회로 발돋움합니다.

의회민주주의는 쌍방통행 ... ‘민생특위’ 조속하게 구성을

지난 7월 말 여야는 공식 중인 국회부의장 선임과 상임위원장 재구성에 합의했고, 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협치의 소중한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멈춰있었던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도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여야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라는 난제를 앞에 놓고 한발씩 양보해 협치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민주주의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쌍방통행이다”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제21대국회가 그간 이뤄낸 합의의 소중한 새싹. 이 싹을 아름드리 협치의 새 정치로 꽃피워 나갑시다. 여야가 4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생을 돌보기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실천에 옮겨주십시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다룰 정치개혁특위, 코로나극복 민생특위, 부동산대책특위, 글로벌 백신허브 특위는 일하는 국회의 표상이 될 것입니다. 4개 특위를 신속히 출범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승자독식 권력구조의 혁파

권력분산형 개헌에 대해 한 말씀 드립니다.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는 혁파돼야 합니다. 대통령과 의회 간 상호견제 시스템도 갖춰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도 해소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과 선거법개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뜻깊은 첫발을 떼어주십시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 이정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행정복합도시 완성의 핵이 될 것입니다. 올해 설계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오늘, 삼육서울병원의 간호사 이수련 씨를 떠올려봅니다. 전신 방호복을 입은 채로 병실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앉아 중증 치매에 코로나 확진까지 겹친 백발의 아흔세 살 치매 할머니와 화투로 그림을 맞추던 이수련 간호사. 이 장면은 많

은 국민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울림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우리 국민들은 인기·비인기종목을 가리지 않고 감동적인 분전에 따뜻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지원에도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한 선수들, 그리고 이들의 분투에 메달과 관계없이 더 큰 박수를 보낸 국민들의 모습까지 모두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국민들에게 이제 국회가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정쟁과 분열의 길을 답습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민생과 협치의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헌법기관인 우리 국회의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권 창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목적이라는 당연한 교훈을 다시 새깁시다. 총선 당시 국민들께 한 약속, 이 자리에서 의원선서 때 했던 자신에 대한 다짐을 늘 상기합시다.

엄중한 시기의 정기국회 ... '대선 전초전' 대선 안돼

비상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가 결코 대선의 전초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기국회가 대권

경쟁의 여파로 국론 분열의 증폭기가 되어서는 더욱 안 됩니다.

품격 없는 국회, 고질적 정쟁은 국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정치의 중심은 국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국회는 중심을 잡고, 국민을 지켜내야 합니다. 국난을 극복하는 일을 한시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품격을 지키고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비록 대선이라는 중대 사안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은 여야가 민생 협치를 통해 위기에 빠진 국민에게 든든한 다리를 놓아주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정쟁과 분열의 길을 택하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위기가 너무나 심각하고, 치려야 할 대가는 너무도 큼니다. 눈앞의 이해에 매달리는 ‘작은 정치’,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여야가 함께 개척하는 ‘큰 정치’, ‘통합의 정치’를 한번 해봅시다.

그것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또 다른 이수련 간호사들에게,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에게, 자원봉사자들에게, 눈물의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국회가 응답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고, 국민들이 우리를 선출해 국회로 보내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민주정치의 부활 ... ‘여’는 야당 득표율을, ‘야’는 의석차이를 인정해야

‘진정한 민주정치’를 부활시킵시다.

여당은 포용력을 보여주십시오. 야당도 초당적 협력을 실천해 주십시오. 제1야당은 총선결과로 나타난 여당의 180석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당은 제1야당이 총선에서 득표한 41%의 득표율을 존중해야 합니다. 비교집단체와 무소속 의원들도 모두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국민의 대표들입니다. 이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민주정치를 부활시킵시다.

국회의 결정과 국회의원의 선택은 오직 역사와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결정과 선택의 기준은 오직 국민과 국익입니다. 위기의 강을 마주친 국민에게 위기의 강을 건널 수 있는 희망의 다리를 놓아주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합시다. 이는 헌법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결코 대선 전초전이나 대리전을 치르는 품격 없는 국회가 되지 맙시다. 우리 국민 모두의 민생경제회복, 모든 국민의 안전, 모든 국민의 희망, 다시 말해 민생경제, 국민안전, 민생 미래를 위한 ‘삼민(三民)국회’를 만들어 갑시다.

삼민 정기국회는 국민과 헌법의 명령입니다. 앞으로 정기국회 100일은 온전히 국민을 위한 국민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특집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정책 방향

법률서비스·부동산·택시 등 오프라인 산업의 디지털화가 거세지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독점에 따른 가격인상과 불공정 거래, 기존 산업과의 규제 형평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산업의 부작용은 해소하면서 상생과 발전을 이어갈 바람직한 입법 정책 방향을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보았습니다. <편집자주>



한발 늦은 플랫폼 산업 규제, 소상공인의 고통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송유경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발전위원장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공감대 바탕으로 규제 도입 필요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해야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정보통신강국의 철학과 비전 담은 온라인 플랫폼 법제 필요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정혜련 경찰대 교수

온라인 플랫폼 관련 국회 입법 동향

송민정·강재구 입법조사관

한발 늦은 플랫폼 산업 규제, 소상공인의 고통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송유경 유통산업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대다수는 영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에게 거대 온라인 플랫폼은 시장 접근을 위한 필수 통로가 됐다. 강력한 예측관계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의 광고비·수수료 부과, 고객정보 독점 문제 등에서 협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거의 없다. 플랫폼 사업자는 전통적 산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지는 통제력보다 훨씬 강력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와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해줄 것을 꾸준히 호소해 왔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5곳 중 1곳(20.7%)이 불공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 귀책사유와 무관한 책임 전가, 불분명한 노출 순위와 알고리즘 조작,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 자사 거래건 우선배송 강요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시장 독식과 정보 독점을 바탕으로 플랫폼들이 시장을 교란하기 시작한 것이다. 플랫폼 시장은 승자독식의 논리로 움직인다. 단기적으로는 적자를 감수하더라

도 한번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후발주자의 진입을 막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다.

‘쿠팡’은 수년간 천문학적 적자규모에도 계속적인 비용 투입을 통해 온라인 유통업계의 선두주자가 됐다. ‘카카오’는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계열사가 117개, 해외를 합치면 158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네이버’ 역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지분 투자 등 간접 진출하는 방법을 택했을 뿐, 금융·유통·엔터테인먼트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다.

이에 플랫폼 기업들이 소상공인들과 직접 경쟁하기도 한다. ‘배달의 민족’은 B마트를 출시해 지역 영세 소매업을 잠식하고 있고, 숙박업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고객의 숙박정보를 활용해 주요 입지에 직영점을 세운 뒤 자사 플랫폼을 통해 공격적으로 광고하면서 기존 숙박업자의 광고 부담이 증가하게 만들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기존 공정거래법을 통해서도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서도 공정거래법은 이미 분야별로 분화되어 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그것이다.

오히려, 온라인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시간·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오프라인보다 크고 규제의 필요성도 더 높다. 온라인에 특화된 불공정거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해 제정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일부는 플랫폼 규제가 시장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플랫폼 시장은 사업 영역과 관계없이 중개거래라는 형태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없었다. 중개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규제는 플랫폼 사업 내용의 혁신성이나 사업 아이디어의 유연성과는 별개의 문제다. 규제 대상도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으로 하한선을 정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출이 온라인 플랫폼에 종속

특히, 대다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이 온라인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이 엄존함에도, 입점과 퇴점이 자유롭다는 이유로 입점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플랫폼 업체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입점업체의 거래 전환이 용이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 간의 경쟁 문제일 뿐, 입점업체가 거래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과는 별개다.

추가로, 플랫폼 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판매대금 정산방식·절차, 검색결과 노출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 입점업체의 최소한의 요구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이미 작년 6월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된 법안이다. 시간을 끌수록 사각지대에 방치된 소상공인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입법이 조속히 완료되기를 바라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입점업체의 목소리가 좀 더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공감대 바탕으로 규제 도입 필요



박성호 회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는 20억 명을 돌파했고, 손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국경은 의미가 없어졌고,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은 무한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초기에 눈에 띄는 혁신으로 이용자들을 매료시킨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을 확장하고 성장시켰으며, 이용자에게 새로운 편리함을 안겨주었다. 직접 발로 걸어가야 만날 수 있었던 작은 골목의 소규모 음식점과 상점도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닿도록 했고, 비싼 국제전화 요금을 내지 않고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용자와 얼굴을 보며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했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에는 화상회의 서비스 등을 통해 국가 시스템과 우리의 삶 전반이 마비되지 않도록 지원했다. 또한, 대국민 알림서비스, 접종 예약시스템 등 정부의 역할도 일정 부분 대신했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혜자도,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은 대상도 아니었다. 사회 혁신의 필요성에 확신을 가진 소수 개발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스스로 과감하게 도전하고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아 성장했다. 이렇게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혁신은 대중들로부터 환영받았고,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자 이러한 혁신은 독과점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다른 기업들이 그 기술을 따라잡을 때까지 일정 기간 시장과 산업을 주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은 더 자주, 더 크게 일어나므로 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플랫폼 기업은 더 오래 주도권을 잡았다. 그러자 혁신에 반감을 품은 일부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혁신은 필연적으로 현재에 대해 변화를 추구하므로 현재의 것과 갈등을 야기한다. 그러나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갈등을 상호이익으로 승화시키는 지혜와 차별한 사회적 논의 대신에 혁신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파도처럼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배려하는 것은 맞지만 혁신기업들을 규제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다. 성급한 국가의 개입은 돌이킬 수 없는 시장 실패,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의 실패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 사회가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법 말고도 사회적 평가나 여론, 자정노력과 연성규범 등 매우 많은 통제수단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런 수단들을 상기시키는 것이 정치이나 우리는 정치의 부재를 겪고 있어 아쉽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입법만이 해결책일 때도 있지만 오로지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쉽지만, 낮은 수준의 대응이다.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장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여러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다른 산업의 기존 규제 혹은 해외의 규제를 표현만 바꾸어 시급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최근 이러한 규제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심지어 각 부처들이 자기부처의 규제권한의 확대를 위해 선악의 대립구도로 정치권을 설득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시장에는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플랫폼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시장의 상황을 설명하고 개선 의지를 피력했지만, 국회와 정부는 귀담아듣지 않았다.

규제 도입을 위해선 시장 특성 분석해야

이처럼 규제 도입 목적과 과정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함에도 플랫폼의 단면만 부각하며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입법 방향이 아니다. 규제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시장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시장 내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스스로 잘하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공적 기관이 데이터를 통해 증명하고, 해외의 유사 규제 도입 배경과 도입 후의 상황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사후 규제 형태로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며 수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부처는 사전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산업에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장을 위축시키고, 혁신을 저해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정책은 당장 또는 단기기간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세상을 염두에 두고 긴 안목에서 정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해야

플랫폼 산업의 성장 초기 플랫폼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무료나 매우 저렴한 수수료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했고,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했다. 입점업체 역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었다. 플랫폼 기업과 소비자, 입점업체의 목표가 충돌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플랫폼은 온라인 시장의 공정한 심판으로서,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대의 혁신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최근 플랫폼을 보는 시선이 과거와 같지 않다. 시장을 독점한 플랫폼 기업들은 더이상 심판이 아닌 선수로 뛰기 시작했고,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와의 페어플레이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로 국내 검색 서비스 시장 1위 플랫폼인 '네이버'가 자사의 오픈마켓 서비스인 '샵N'(현 스마트 스토어)을 출시하면서부터 샵N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이 수익화를 위해 플랫폼 서비스 사용료를 올리는 것 역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택시 호출 시장 1위 플랫폼인 '카카오택시'가 택시 호출 수수료를 인상했다가 택시업계와 언론의 못매를 맞고 수수료를 다시 과거 수준으로 인하하기도 했다.



송상민 시장감시국장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혁신의 싹마저 자를 위협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플랫폼 규제가 플랫폼 기업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편익을 축소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막는 것을 넘어서 플랫폼의 창의와 혁신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정부 입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정화법은 플랫폼 시장의 규칙을 바로 세우되,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입법과정에서 플랫폼 기업, 입점업체 및 전문가 등과 총 15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세부 규제사항을 정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시장의 혁신을 지속시키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플랫폼 기업은 규율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소규모 스타트업 플랫폼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창의와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직접 규제는 최소화했다. 기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플랫폼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구입강제행위, 부당한 손해전가행위, 경영간섭행위 등을 공정화법에 이관해 규정했다.

셋째, 갑을관계에서 분쟁 예방의 기본이 되는 계약

서 작성 및 교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불완전한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상품 노출 기준, 손해 발생 시 분담 기준 등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에서 중요한 항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고,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한해 입점업체가 피해를 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 시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플랫폼 시장에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해야

마지막으로, 상생문화 확산을 통해 플랫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거래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했다.

최근 문제가 되는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문제의 경우 실태조사 제도를 통해 수수료를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압력을 높이고, 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거래협약의 체결을 유도함으로써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공정화법은 180만 입점업체들이 제정을 기다리고 있는 시급한 민생법안이다. 플랫폼의 갑질 문제나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만큼, 플랫폼 시장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정보통신강국의 철학과 비전 담은 온라인 플랫폼 법제 필요

국민 중장년층에 열차 승강장으로 불리던 추억의 ‘플랫폼’이 오프라인의 장막을 넘어 온라인 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했다. 이 시대의 플랫폼은 네트워크이자 미디어 자체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을 중재하면서 국민 여론의 소통과 공론의 장이자, 실크로드 없는 글로벌 시장까지 다중역할을 수행 중이다. 동시에 플랫폼 안에 등지를 튼 크리에이터·중소·영세사업자·상공인 등과 동반자적 상생관계의 책무도 중요해졌다.

자율과 혁신 보장하되 공적 인프라인 ‘통신’ 특성 감안해야

ICT(정보통신기술) 전문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그간 통신·인터넷 생태계 발전단계를 주시하면서, 자율성·혁신성·책임성 제고 관점에서 플랫폼 정책과 규제를 설계해왔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들은 무료 서비스로 이용자 저변을 확대하는 초기단계를 지나 유료서비스 확대로 수익창출을 꾀하는 성장단계에 진입했다. 시장 경제주체로서의 자율과 혁신은 보장하되, 공적 인프라인 ‘통신’의 특성을 감안해 이용자(사업자와 최종 이용자를 포괄한다) 경쟁과 선택의 제한요인을 걷어내는 등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 굴뚝산업 보다 큰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긍정적인 측면은 새 이용자 진입이 다른 이용자의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방송통신위원회

점이다. 부정적 측면은 네트워크 구성원 간 상호 연동성 때문에 이용자 가입이 많은 서비스일수록 '잠금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물론, 아직까지 '동시가입'과 '이용(멀티호밍)'이 용이해 잠금효과의 상쇄기제가 작동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플랫폼 네트워크 확대전략을 전통산업과 같은 '독과점 시도'로 전제하고 낱알이 규제하면, 이용자 효용감소 등 긍정적 효과마저 배제된다. 아울러 국내 특정서비스 군에 한정된 시장획정을 토대로 국내사업자만 읍전다면 어렵게 확립한 플랫폼 주권 보장도 어렵다. ICT 전문당국이 시장현황에 대한 주기적 분석을 바탕으로, 기업과 이용자 간 소통·협의체계를 지원하고, 멀티호밍의 기회비용 증가나 불합리·차별계약·조건 부과 등을 막는 등의 핀셋형 네거티브 규제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방통위가 플랫폼 인앱결제 강제시도에 대응해 금지행위 규제를 정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은 복제, 전송이 쉬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며, 그 역할 자체가 '상호중재'이기 때문에 기술·데이터·아이디어의 개방성, 투명성, 호환성이 중요하다. 지금의 앱·웹 형태의 플랫폼은 융복합 기술과 결합해 향후 자율주행차, 웨어러블 기기, 메타버스 등 새 영역으로 무한 확장될 것이다. 매일이 새로운 ICT 혁신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플랫폼 기술과 정보의 공유, 이용자의 데이터 결정권 보장, 공정한 AI 활용 이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성장동력인 빅데이터 활용과 맞춤형 서비스 창출에 관해서는 최소 수준의, 섬세한 규제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동반성장, 즉 '상생(相生)'의 가치다. 전문가들이 ICT 뒤에 꼭 '생태계'를 붙이는 것은, 구성원 각자의 행위가 상호생존과 성장에 유기적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다. 이 구역의 '공정경쟁'은 '나쁜기업'을 찾아 도태시키기보다, 구성원 간 상시협의를 통해 나쁜 행위의 유형 등과 페널티를 조율하는 동태적 방식으로 구현된다.

방통위의 이러한 규제철학은 다양한 관련법제 중 ICT 전문 상임위(과방위)에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과 가장 가깝다. 올 상반기부터는 전문가, 산업 관계자와의 집중적으로 논의해 산업 혁신성 제고부문을 보완한 대안도 마련했다. 대안에는 콘텐츠 등 노출기준 공개, 플랫폼 이용정보 등의 공유,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금지행위 규정이 포함됐다. 현재 일반 경쟁당국이 경쟁법적 시각에서 발의한 법제와의 조정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미 큰 틀에서 정부 차원의 조정방향이 제시됐으므로 세부사항에 대한 부처협의를 곧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럽은 이미 ICT 집행당국(정보통신총국)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칙, 디지털시장법·서비스법 등을 추진하며 달려가고 있다.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의 공세 속에서도 자국 플랫폼을 보유 중인 정보통신강국인 한국 역시 그 명성에 맞는 미래지향적 ICT 제도정비를 요구받고 있다. 플랫폼 인앱결제 방지법으로 세계인의 기대가 향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플랫폼과 관련된 입법안이 발의돼 왔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9월 14일자로 시행됐다. 최근 해외 주요국에서도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 움직임이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2015년 5월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이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DSMS’)을 발표하고 플랫폼산업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한 이후다. 당시 집행위원회는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플랫폼들이 정보의 접근권에 대한 핵심 게이트키퍼가 돼가고 있음을 인지했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에서 플랫폼들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일방적 거래조건을 부과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2016년에 ‘중소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소수 플랫폼들에 대한 접근에 의존하고 있거나 플랫폼들이 전례 없는 규모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보유하는 경우 새로운 불균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경우 ‘플랫폼에게 시장지배적 지위가 없어도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은 불공정한 거래행위들에 노출될 수 있다’며 플랫폼-사업자 거래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결정적으로 플랫폼들 중 일부가 ‘불공정한 거래행위들에 가담



정혜련 교수
경찰대학 법학과

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경쟁법 집행 강화 및 필요한 입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어 2018년 온라인 중개 플랫폼과 검색엔진 사업자를 대상으로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플랫폼 규칙 입법 제안을 발표했고, 해당 규정은 2020년 7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작년 12월, 게이트키퍼(Gatekeeper)라는 특정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다 강화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DSA패키지(디지털서비스법, 디지털시장법) 법안이 제안됐다.

일본은 2020년 6월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법을 주관한 경제산업성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 플랫폼은 이용자의 시장접속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장에서는 규약의 변경이나 거래 거절의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 등 거래의 투명성이 낮거나, 상품 등의 제공이용자의 합리적인 요청에 대응하는 절차·체제가 불충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됐다. 이 법은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디지털 플랫폼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거래조건 등의 정보 공개,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 운영 상황의 보고와 평가, 평가 결과의 공표 등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당 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수수료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 최근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독점 및 불공정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하반기부

터 플랫폼 경제 영역의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업계의 독점 및 불공정경쟁 행위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해왔다.

미국, 독점규제법 집행 강화 추세

미국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서가 아니라 포괄적인 법체계를 통해 규제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독점규제법 집행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는 테크 플랫폼(Tech Platform)의 집중에 대한 우려에 의한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지배력은 소비자의 선택 감소, 미국 경제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 침식, 자유롭고 다양한 언론 분위기 약화, 미국인들의 사생활 침해 등을 일으킨다는 문제를 고려해 독과점 규제의 기준을 '이용자 후생'에서 '혁신 저해'로 전환시키려는 것이다. 이후 연방정부와 의회 및 주 검찰 등이 합세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테크 기반 거대플랫폼의 디지털 독과점에 대해 규제 입장으로 전환했고, 위 4개 사업자에 대해 동시다발로 조사에 착수해 2021년 6월 11일 미국 하원의 반독점 소위원회가 '강력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이라는 명칭으로 거대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국들은 주로 독점금지법 혹은 경쟁법을 개정해 새로운 개념의 플랫폼을 포함시키고, 소비자보호법제를 개정 입법하는 방식으로 특정 대규모 플랫폼사업자를 규제함으로써 시장을 규율하고 있다. 🍵

온라인 플랫폼 관련 국회 입법 동향

정무위원회

정무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산업 관련 입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B2B 관계에서의 공정거래 구현을 위한 입법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운영사업자 및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B2C 관계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의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B2B)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총 7건(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정부제출)이 계류 중이다.

각 제정안들은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정안들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

한 각종 제도들을 규율하고 있다. 각 제정안별로 세부 내용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부여, 계약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통지 의무 부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 등을 두고 있다.

다음,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B2C)를 규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각 개정안들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전통적 통신 판매를 전제로 설계되어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최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법률의 주요 용어들을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정비하고, 정보 제공 확대 등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무위원회 주요 발의 법률안〉

구 분	법 률 안
B2B 관계 규율 (7건)	-‘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835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2107622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107703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108626 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2109598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2107743 정부제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2108802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B2C 관계 규율 (6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2109213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110377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110744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111109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112104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11362 송재호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 개정이 있었다.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14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앱마켓사업자(앱 플랫폼)가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앱 판매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인앱결제와 관련된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에 명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법제화의 첫발을 내딛음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EU 등에서도 그동안 진행되어온 플랫폼 관련 입법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21대국회에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이 발의·제출됐는데, 이하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주요 법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된 규제 체계를 가장 큰 틀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이 있다. 동 제정안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모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다양한 행위 규제를 부과하는 한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콘텐츠 노출 순서 결정 기준(알고리즘) 공개 의무 등 추가적인 규제를 부과하는 이중 규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현행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법률안으로는 5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모두 부가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담을 강화하는 법안인데,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글 송민경 · 강재구 입법조사관
정무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 내용
2109261	변재일 의원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행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2110519	김영식 의원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해당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2111068	한준호 의원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제를 신설함.
2111309	양정숙 의원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의무 제공의무를 부과함.
2111519	김영식 의원	부가통신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인터넷접속의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함.



“정쟁이 아닌 정책의 장이 되는 정기국회 이끌 터”



한병도 국회운영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익산시울)

Q 국회운영위원회 여당 간사(원내수석부대표)로서 소감과 포부를 말씀해주십시오.

A.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민생 경제의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라는 지상 과제 해결과 함께,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맞는 마지막 정기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및 부대표단과 함께 산적한 민생 현안이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동분서주하고, 야당과의 원만한 소통, 협의를 통해 정기국회가 정쟁이 아닌 정책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청와대와 국회를 소관하며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상임위이자, 국회 운영의 방향타라 할 수 있는 국회운영위의 간사로서도 국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제21대국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가 거둔 주요 성과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크게 세 가지 성과를 예로 들겠습니다. 첫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관련 ‘국회법’ 개정입니다.

그동안 국회는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했을 때에는 법사위에 회부해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심사로 인해 법안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습니다. 이에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체계·자구 심사 중인 법률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음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9월 14일 공포됐습니다.

둘째,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국회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 부처는 국회의와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다 보니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이 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차 속에서 업무를 봐야하는 ‘길 국장’, ‘길 과장’이 양산돼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두어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국회운영위에서 심사·의결해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국회법 개정안)이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하고,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회 보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 올해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나 과제가 있으면 소개해주시요.

A. 이번 정기국회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회 창출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교차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과 함께 한국판 뉴딜 입법, 2단계 재정분권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입법, 부동산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민생 입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논의하기 위해 야당과 함께 8인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국회에 들어가며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2021년도 대비 8.3% 증가해 국가예산이 최초로 6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함께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사회를 준비하고 이끌 글로벌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충분한 재정투자가 필요합니다. 경제의 회복과 방역의 성패 모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반드시 법정기한을 준수해 내년도 예산안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상대 간사님께 칭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국회 안팎에서 신사 의원으로 유명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젠트함뿐만 아니라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갖추고 계신 저의 좋은 협상 파트너입니다. 서로의 사무실을 수시로 찾아 국회의 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꼭 일 때문이 아니더라도 즉석에서 식사 약속을 잡아서 만날 만큼 친밀한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야가 입법 과정에서 의견이 갈려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지만, 저와 추 수석님이 서로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려 노력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내수석부대표 임기를 마칠 때까지 ‘국회 최고의 콤비’로 호흡을 맞춰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글 김현아 사진 김지범



“국민과 함께하는 유연한 정치 되도록 노력할 것”



추경호 국회운영위원회 간사(국민의힘, 대구광역시 달성군)

Q 국회운영위원회 야당 간사(원내수석부대표)로서 소감과 포부를 말씀해주십시오.

A. 국회운영위 간사이자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체적인 국회 운영에 참여하는 동시에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여야 협상을 실무 대표로 이끌어가야 하는 자리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여당에 양보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선 강하게 맞서겠지만,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유연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제21대국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가 거둔 주요 성과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지난 7월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정상화하는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총선 이후 1년 넘게 풀지 못했던 숙제였지만 여야가 모두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국민의힘은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이관 약속을 포함해 7개 상임위를 배분받고 내실 있게 원 구성 문제를 매듭지었습니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담아내지 못해 아쉬움은 남지만 2차 추가 경정예산을 원만히 타결한 것도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최대한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저희 당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정부·여당의 입장을 경청하되,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야당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Q 올해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나 과제가 있으면 소개해주십시오.

A.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은 '100일 민생 대장정'이라는 기조 아래 국민과 함께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 중심의 법안·예산 심사로 우리 국민께 힘이 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기국회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 정권의 실정을 드러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부패, 실정을 국민께 낱알이 고발하고, 수권정당의 면모다운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알려드리는 기회로 삼을 겁니다.

희망 고문만 반복하는 코로나 정치 방역, 주거 고통만 남긴 부동산 실정, 공공알바만 늘린 일자리 참사, 전력위기만 초래한 탈원전 정책,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전 국민을 빛의 포로로 만든 역대급 확장재정, 북한 핵시설 재가동만 남긴 남북평화쇼 등 현 정권의 안하무인식 독주가 국민들에게 안겨준 고통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정기국회 중점 입법과제는 ①주거 사다리 복원 ②좋은 일자리 창출 ③미래 희망 키우기 ④안전 대한민국 구축 ⑤안심 사회 만들기 등 5가지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포스트 코로나 시

대를 대비하기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경제살리기 법안, 그리고 코로나19 위기극복 관련 법안 등의 처리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문정권이 무너뜨린 우리 국민의 일상을 회복시켜드리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입법·정책 목표입니다.

한편, 얼마 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은 정부예산 600조 원, 국가채무 1천조 원(5년간 400조 원 이상 증가)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모두 국민 혈세와 미래세대의 부담인 만큼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되, '대선용 정치 예산'은 살살이 찾아 반드시 걸러낼 것입니다.

Q 상대 간사님께 칭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가 요즘 아내보다 더 자주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여야 협상 파트너로서 서로 날을 세워야 할 일이 잦지만, 사석에선 형, 동생하는 절친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각자 원내수석부대표로 취임한 이후 약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수차례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힘을 앞세우기보다,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원내 협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많이 노력해주셨습니다.

평소 겸손의 미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만큼 상대를 존중하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회 운영의 파트너로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진심을 담아 귀 기울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글 김현아 사진 김지범



대전 동구 식장산 전망대에 위치한 식장루 앞에서

원도심 활성화로 새바람 부는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秋分). 이날을 기점으로 밤의 길이는 점점 길어지고, 가을은 점점 깊어진다.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이 우리 앞에 다가온 9월의 어느 날, 원도심 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새바람이 불고 있는 대전 동구를 찾아 장철민 의원을 만났다.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이곳 대전 동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소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와 원도심 활성화 및 동서 균형발전

장철민 의원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대전시 동구 ‘행복나눔 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린 소제중앙문화공원 관련 보상계획 주민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장기간 중단됐던 대전 소제중앙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가 열린 것이다.

삼삼오오 복지센터에 모여든 주민들은 “부모 세대까지 합쳐 100년 이상 살아온 곳이다. 보상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장철민 의원은 “대전 동구에서는 현재 많은 곳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서울·지방 간 균형발전뿐 아니라 대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뒤쳐진 동구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 시간부터 주민간담회에 참석하면서도 장철민 의원은 지치기는커녕 기대감에 들뜬 얼굴이었다.

“작년 10월 대전 원도심을 획기적으로 바꿀 대전 혁신도시 지정안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어요. 대전역 주변의 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을 혁신도시로 조성해 동서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또 수도권에서 이곳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해, 청년들의 취업문도 열리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해 질 녘 노을 풍경이 일품인 대동하늘공원

장철민 의원이 다음으로 찾은 곳은 대전 동구 대동하늘공원 근처에 있는 대동사회종합복지관이었다. 이번에는 대동하늘공원 조성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주민

대동하늘공원





좌)대동하늘공원 설명회
우)식장산에서 내려다본
대전 시내 전경

설명회가 끝나고 잠시 짬을 내어 대동하늘공원에 들렀다. 대동하늘공원은 방송에도 소개됐던 대전의 명소다. 이곳에서도 장 의원은 잠시 풍경을 즐길 새도 없이 대동하늘공원 확장 공사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2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들을 위한 녹지공간과 휴식시설을 짓는 대동하늘공원 확장 공사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동하늘공원이 있는 대동 골목은 한국전쟁 당시 모여든 피난민들이 마을을 이루며 그 역사가 시작됐다고 한다. 대동하늘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정겨운 골목골목에서 다채로운 벽화를 만나볼 수 있다. 벽화를 구경하며 숨이 차도록 걸어 하늘공원에 오르면 탁 트인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해 질 녘 이곳을 찾으면 대전역 쌍둥이 빌딩 사이로 노을이 지는 풍경이 예술”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SNS 상의 인기 있는 명소가 됐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의 ‘야간관광 100선’에도 뽑힌 곳이다. 하늘공원에는 대표적인 상징물인 풍차가 설치돼 있다. 벤치와 정자에서 한가롭게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곳이다.

대전 동구의 명산, 식장산

이어 장철민 의원이 취재진을 안내한 곳은 대전 동구의 명산, 식장산이었다. 대전 동남쪽에 위치한 식장산은 정상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일출·일몰 풍경, 그리고 대전 시내와 자연 풍경이 어우러진 야경으로 유명한 곳이다. 식장산은 삼국시대에 백제의 요새 지역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산에 ‘군량미를 많이 쌓아두는 곳’이라는 의미의 ‘식장산’(食藏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다고 한다. 대전 시내가 펼쳐지는 시원한 풍경을 감상하기도 전에 식장산을 찾은 주민들이 장철민 의원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식장산 기슭에는 유서 깊

은 고산사와 구절사, 개심사 등 유명 사찰들이 위치해 있다.

대전 동구에 위치한 우암사적공원은 조선 후기 학자인 우암 송시열 선생이 학문을 닦던 곳이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 1만 6천여 평에 장판각, 전시관, 서원 등 16동의 건물을 복원해 사적공원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이곳은 선생이 말년에 제자를 가르치고 학문에 정진 하던 남간정사, 건축미가 뛰어난 기국정, 송시열 문집인 송자대전판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 곳곳이 잘 단장되어 있어 도심 속 시민들의 쉼터로도 제격이다.

“젊은 힘으로 대전 동구 바꿔나가겠다”

장철민 의원은 1983년생으로, 대전 지역 최연소 의원이다. 28세에 홍영표 의원실 정책비서로 시작해 5년 만에 4급 보좌관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현재 환경노동위,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이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기도 하다. 서대전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그는 “정치에 뜻을 갖고 제 발로 찾아가 의원실 공채에 지원한 게 제 정치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텃밭’이라는 이 지역에서 야당 현역을 꺾고 당선됐다.

정치 신인이었던 그는 “변화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은 여당의 힘, 젊은 힘”이라며 유권자들을 설득했다. 장 의원은 “이 지역은 앞으로도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라며 “할 일이 많다는 게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초심은 변치 않되, 동구는 확실하게 바꾸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당선 이후) 단 1년 만에 이미 많은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복합2구역 개발, 쪽방촌 재생사업, 서광장 조성사업,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동구도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

대전 동구 | 글 박민선 사진 임진완

우암사적공원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중구성동구갑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대표)

10월호 ‘칭찬합시다’ 주인공은 용혜인 의원이다. 그를 추천했던 홍익표 의원은 “정치 신인으로 어떤 의정활동을 할까 궁금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고, 청년세대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열정과 책임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저를 칭찬해주실 줄은 생각 못했다”며 활짝 웃었다. “평소 늘 깊이 있는 질문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품격 있는 모습에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칭찬에 힘입어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정치는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만드는 일”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장에 유모차를 탄 아기가 등장했다. 용혜인 의원이 생후 59일 된 아들을 데리고 국회에 출근한 것이다.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던 국회가 잠시나마 화기애애해졌다. 많은 의원들이 출산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용 의원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용 의원은 회견장에서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각 당의 원내대표실을 찾아가 ‘아이동반법’ 통과에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다.

‘아이동반법’은 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국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용 의원은 지난 5월 여야 의원 61명의 동의를 받아 이 법을 발의했다. 출산

9일 만이었다.

“여성 의원만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출산과 육아가 필요한 남성 의원들도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일터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은 출산, 육아로 인해 해고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아이돌반법은 변화를 위한 작은 시작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의 ‘기본소득’ 실현

용혜인 의원은 1990년생으로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류호정 의원(정의당)과 함께 1990년대생 국회의원 3인 중 한 명이다. 21세 때 진보신당에 입당한 뒤 노동당 공동대표를 지내다 기본소득당을 창당했다. 기본소득당은 당직자 대부분이 20~30대로 ‘젊은 정당’으로 불린다. “자산과 소득 불평등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본소득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차에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본격적으로 사회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각종 참사가 불러온 구조적 문제들에

절망하기보다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특히 정책의 개혁뿐 아니라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정치로써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국회에 들어와 가장 보람됐던 의정활동 중 하나로 ‘기본소득 공론화법(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꼽았다. 그는 “기본소득법안들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금액, 지급 방식 등 그 내용은 서로 다르다”며 “각 법안을 별개로 논의하는 것보다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국민과 숙고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기본소득은 찬반의 문제뿐 아니라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지급할지 그 구체적인 정책 모델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정치의 최대 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아도 되는 사회, 나아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넘어설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 기본소득 실현을 꼭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



오영환 의원을 칭찬합니다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의정부시갑)과는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토론회를 함께 주최했습니다. 진심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분입니다. 마음의 울림을 주시는 분이네요. 진심을 다해 사람을 대하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의 태도와 의정활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글 윤성혜 사진 김진원

초	지	일	관
(初)	(志)	(一)	(貫)

“청년시절 처음 세운 뜻이 삶을 관통하는 원칙 돼”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양천구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시민운동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이용선 의원은 2018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역임한 후 지난해 총선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초지일관(初志一貫)’이 인생 좌우명이라는 이용선 의원을 만나 그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들었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던 이용선 의원은 광주민주화운동을 직접 겪었다.

“유신정권 말기인 1977년 대학에 들어가 바로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4학년 때인 1980년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과 학생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보고 그 내용을 전단지로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당시 계엄령이 선포되고 언론보도가 통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었지요. 그 일로 감옥에 가게 됐고 강제징집을 당해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그 후에는 계속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청년 때 삶의 방향을 정한 후 평생 그 뜻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점에서 ‘초지일관’은 제 삶을 관통하는 원칙이 된 것 같습니다.”

대학 때부터 공장 활동(공활)을 많이 했던 이용선 의원은 제대 후에도 노동자로 살면서 노동운동을 이어갔다.

“1985년 저와 홍영표 의원 등 학생운동 출신들이 대우자동차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해 4월 노조 민주화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10여 일간 파업투쟁을 벌였습니다. 대우자동차 파업투쟁은 해방 후 첫 대기업 노동자들의 파업이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학생운동 출신들이

노동현장으로 들어갔고 노동운동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그 후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전국에서 노동자대투쟁이 벌어지고 노동조합 조직화가 급속히 증대됐는데, 대우자동차 파업투쟁은 노동자대투쟁의 초석이 된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1992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여러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이용선 의원은 1996년부터 12년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 간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김일성 주석 사망 후 불거진 조문 문제로 남북 관계가 쑥쑥 얼어붙은 상황에서 1995년 북한에 대홍수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최악의 식량난에 직면하지만 남한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니다. 이때 범종교계와 시민사회가 나서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발족하고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야 하지 않느냐’며 여론을 설득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을 지내며 방북한 횟수만 100차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통해 남북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힌 것이 가장 큰 보람이자 성과”라고 말했다.

“민생현안과 남북문제 해결에 일조할 것”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이 참패한 뒤 이용선 의원은 야권통합추진기구인 ‘혁신과 통합’을 만들어 민주통합당 창당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연이은 선거 참패 후 정부 정책에 대해 감시만 해온 시민단체가 직접 나서서 정치적 균형을 바로잡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운동에 나서게 됐고 시민단체 대표로 출마까지 했습니다.”

여의도에 입성한 이용선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금 이자상환 문제를 지적해 개선책을 이끌어낸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기존에는 6개월간 상환 유예된 이자를 그 이후 6개월 동안 나누어 내거나 한 번에 몰아내야 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자 폭탄’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해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이자상환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선 의원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코로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야 의원들과 함께 노력 중이라고 했다. 또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난민 보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한국과 인연을 맺은 아프간 협력자들의 탈출을 돕기 위한 노력도 해왔다.

“양극화와 저성장 시대에 가장 맞는 시대정신과 과제는 불평등 해소와 민주주의입니다. 양극화 핵심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는 공공주택과 주거복지, 토지공개념 등으로 풀어야 합니다.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평화공동체를 이룩해 공존협력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간 시민운동 영역 등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현안과 남북문제 해결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

글 김현아 사진 임진완

“동시대를 사는 이들의 가슴속에 기억되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



이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영 의원은 보안업계 1호 여성 최고경영자(CEO) 출신이다. 당시 여성으로는 드물게 암호학을 전공했다. 어릴 때부터 연예인 사진 대신 천체 사진을 벽에 붙였던 여학생이었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뒤 KAIST 대학원에서 암호학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00년 대학원 재학 중 선후배들과 함께 보안기술 기업을 창업한 뒤 20여년간 운영하다 제21대국회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영 의원을 만났다.

서울 종로구 출신인 이 의원은 3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부친이 병석에 누워 어머니가 일을 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제게는 여자가 일하는 게 거의 숨 쉬듯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 영향 덕인지 세 자매 모두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로봇과 우주에 관심이 많았고, 과학 잡지를 살살이 읽고 자랐다. 이 의원은 “형편은 어려웠지만 구김은 없었다. 집안에는 깔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항상 밝았던 어머니 덕택”이라고 회상했다.

보안업계 1호 여성 CEO 출신 국회의원

이영 의원은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하다 암호학에 매료됐다. 그는 “대학원 진학 당시 암호학은 정말 낯선 학문이었다. 가르치던 교수와 배우는 학생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공부하던 시절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다 2000년 KAIST 대학원 재학중 선후배들과 함께 보안기술 전문 기업인 ‘테르텐’을 설립했다. 이영 의원은 “디지털 불법 복제를 막는 솔루션을 개발하며 미련하다 싶을 만큼 R&D에 집착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영업이었다. 이 의원은 “대표이긴 하지만 영업도 해야 했다. 막막했다. 여성 CEO는 영업이 정말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함께 공부한 선후배들은 교수나 연구원으로 방향을 잡았고, 당시만 해도 보안업계에는 여성 자체가 없어서 학연이나 지연 같은 데도 기댈 수 없었죠. 나이 지긋한 기업 CEO들은 젊은 여성이 만나자고 하면 꺼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영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한국여성벤처협회에 가입하게 됐던 거죠.”

그렇게 발을 딛게 된 한국여성벤처협회에서 활동하면서 뜻밖의 재능을 발견했다.

“업계에서 희소성이 있는 여성이다 보니 어쩌다 정보기술 관련 간담회나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면 주구장창 벤처 생태계, IT 규제, 제도 개선 같은 얘기만 쏟아냈어요. 당장 내 제품을 파는 것보다 ‘우리’ 이야기, ‘업계’ 이야기를 할 때 더 목소리가 커지고 힘이 났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동료, 선후배들이 ‘당신은 사업보다 정치를 해야 한다’고들 말하기 시작했지요.”

2015년부터 2년간 제9대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을 맡았다. 그 밖에도 한국무역협회부회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정책조정전문위원, 한국정보보호학회 부회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사이버사령부 자문위원, 국가보

안연구소 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지난해 제21대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처음에는 정치를 하는 것 자체를 망설였지만 여의도에 가면 지금까지 벤처업계에서 쌓았던 경험이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았다”고 했다. 그는 “어딜 가나 자기 것만 고집하면 성장을 못하지만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다는 게 제 신조”라고 했다.

IT 기업이 출신 의원답게 이영 의원은 남달랐다. 당사자 총회 인사에서부터 미래통합당의 디지털화를 강조했다. 제21대국회에서 처음으로 전자발의를 활용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또한 이영 의원은 정부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 뉴딜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같은 당 의원들로부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치밀하고 논리적’이라는 평을 들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마했던 그는 지난 5월 25일 열린 제1차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서 ‘AI(인공지능)’를 등장시키기도 했다. 기존 관행을 넘어 과학기술과 데이터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 혁신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영 의원은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디지털정당위원회는 당 조직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디지털 문화를 정착시키고 관련 지원을 하는 조직이다. 이 위원장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디지털 전국 조직을 구성하며 선거를 지원했다. 그는 “여의도 시계는 과거 아니면 현재에만 국한된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국가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여의도의 시계를 미래로, 관점을 글로벌로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 정치가 무엇인지 엄청 고민했어요. 결론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꿈을 향해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가적으로는 국가가 역사적으로 진일보하도록 견인하는 리더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기억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

글 박민선 사진 김지범

사업장폐기물 국가책임제, 게임 셋다운제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사업장폐기물 국가책임제 토론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31일 ‘사업장폐기물 국가책임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단지가 모여 있는 농촌지역에서 산업폐기물을 관리하는 폐기물 매립업체와 산업폐기물장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민간에 맡겨져 왔던 산업폐기물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또한 폐기물 운영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해 폐기물장 주변 지역에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변호사는 “민간업체들이 매립장 인·허가만 받으면 돈을 번다는 생각이 커지다 보니, 산업폐기물 매립장 입지로서 적절하지 않은 곳까지 무분별하게 매립장이 추진되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사업폐기물 처리 원칙을 공공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남훈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일본을 벤치마킹하면 매립장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도 공공의 매립장 처리 시설을 늘려 불법 폐기물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며 “사후 관리 이행보증금도 보험이나 담보대출이 아닌 일본처럼 현금으로 납부받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국장도 “한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과제로 순환 경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할 때, 전체 폐기물의 88.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국가 책임이나 공공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정부의 역할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자원순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송옥주 의원은 “지금처럼 민간 폐기물 업체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면서 매립이 끝난 후 사고가 나면 국가가 책임지는 관리 방식은 안 된다”며 “국가가 안

전하게 운영했으면 지금처럼 주민들이 폐기물매립장 때문에 걱정 할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폐기물매립장을 공공으로 관리해 주민의 안전과 환경피해를 막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각계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9월 2일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정부는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와 수면권 보장의 취지로 2011년부터 ‘셧다운제’를 시행해 왔다. 16세 미만 청소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그러나 제한 시간 이후 인터넷 게임의 접속이 차단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OTT와 SNS를 통해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체적으로 해당 규제 폐지 취지에 대해 공감했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권 주체로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

부분이었다. 다만 정부 관계자들을 제외한 이들은 정부가 부모, 교사 등에게 게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판도라의 상자처럼 셧다운제 폐지로 인해 게임에 대한 또 다른 규제가 생겨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게임의 부정적 인식을 떨치기 위해선 국내 게임사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 셧다운제는 국가후견주의의 한계를 분명히 일탈한 것”이라며 “현행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 과몰입 청소년 및 가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운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청소년 게임이용과 관련해 게임을 위해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통해서 소통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발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과 수면시간 확보의 목적으로 운영된 것인데, 최근 ‘과잉규제 정책’으로 지목받게 되면서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이제 폐지 수순을 밟게 됐지만 관계 법률들의 개정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게임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는 비대면 사회로 접어들면서 확산돼 가고 있고, 또, 한국은 메타버스 시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게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

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은아 의원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은 규제가 실행되다보니 곳곳에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일방적으로 틀어막기만 하는 규제로는 원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작용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한때의 잘못된 인식과 판단이 만들어낸 섣다운제 규제를 이제 다시 여야의 협력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학술토론회

우원식, 민형배,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월 6일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대역 사건과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진상 규명, 희생자 추모를 위해 마련됐다. 1923년 발생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은 유엔 국제협약이 규정한 특정집단 대량학살 행위로 제국주의의 참상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다.

당시 일본정부는 지진이 발생한 혼란을 틈타 계엄령을 선포하고,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를 조직적으로 유포했다. 일본 경찰과 자경단이 조선인 학살에 가담한 사실도 역사적 증거로 남아 있다. 하지만 사

건 발생 100년이 다 되도록 일본 제국주의가 자행한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공개와 공식사과는 없었다.

이만열 시민모임 ‘독립’ 이사장은 “진실을 캐서 한일 간의 큰 수렁을 메워가자는 것인데, 아직 미흡한 상태”라면서 “시민단체가 나서 국회와 정부를 움직이고, 일본에서도 진실의 윤곽이 밝혀지고, 이로 인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며 새로운 한일관계를 성립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수 일본 히토쓰바시대 교수는 현재 일본사회에서는 9월 1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해 자연재해의 공포를 상기하는 날로만 지낼 뿐 조선인 대량학살이 자행된 역사에서 교훈을 찾는 움직임이 기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조선인 학살 문제에 대해 외롭지만 꾸준하고 힘있게 문제를 제기해 온 재일 조선인과 양심적인 일본인의 운동을 거울삼아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조선총독부에서 본국으로 보낸 일본 식민지배 관련 자료가 모여 있는 곳은 경시청이며, 이곳 자료는 미군도 손대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일본 당국의 사죄뿐만 아니라 경시청 소유 자료에 대한 공개, 또는 공동연구를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우원식 의원은 “더 이상 우리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을 민간차원의 조사와 추모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일제의 잔혹한 만행에 의한 우리 국민의 희생을 추모하고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서동용 의원도 그동안 미진했던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폐기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사건발생일인 9월 1일 국가추모일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9월 7일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 100세 시대를 여는 건강선순환의 시작’을 개최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핵심 질환이 바로 골다공증이다. 전문가들은 골다공증을 국민의 노후를 위축시키는 건강악순환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골다공증 환자수도 100만 명에 달하며, 특히 노년층에 발생하는 골다공증 골절의 경우 사망률이 최대 17%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치료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다.

이유미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 척추 골절 등으로 요양·와병 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의 참담한 현실을 지적했다. 초고령사회 건강 선순환의 핵심은 효과적인 골다공증 지속치료를 통해 ‘빠 건강 선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 교수는 “최신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간 골밀도 상승 효과 및 안전성이 확인된 골흡수억제제의 경우, 골밀도에 따른 투여기간 제한 없이 골다공증 지속치료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영균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골다공증 환자 중에서도 이미 골절을 경험한 초고위험군 환자들의 재골절이 4명 중 1명 꼴로 발생하고, 재골절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치명률이 가장 높은 척추 골절을 겪는다”며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들의 재골절 예방을 위해 더 강력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참석자들은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주영 성균관대 약대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의 보건의료빅데이터에 기반한 최신 골다공증 골절 관련 연구를 발표했다.

김덕윤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은 “골다공증 골절은 건강수명을 저해해 행복한 노후를 가로막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초고령사회의 대표 질환”이라며 “골절 예방의 핵심은 효과적인 골다공증 치료로, 국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우리나라 골다공증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계와 언론, 보건의료인과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현 시점에서 건강한 노년의 보장은 더 이상 노인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가적 사안이다. 노년기 삶과 건강을 위협하는 골다공증 치료환경의 개선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적 의제”라며 “이번 토론회

를 통해 골다공증 치료환경을 시대 변화에 맞게끔 변화시키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보호 아동의 친권 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김상희 국회부의장, 홍익표·강선우·고민정·신영대·오영환·이수진(서울 동작구을)·조오섭·홍정민·최혜영·전용기·양이원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9월 8일 ‘사회적 보호 아동의 친권 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친권자의 연락 두절, 소재 불명, 사망 등으로 인한 법정대리권 공백으로 위급한 수술, 보험가입, 통장개설 등 미성년 보호대상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진단하고, 국내 친권보충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호대상 아동과 관련해, 민법과 아동복지법의 상충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지자체의 보호를 받게 돼 있으나 민법에서는 친권이 있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친권자를 대신해 아동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아동복지시설의 후견인에 대한 무료법률 상담 지원, 후견인 신청 간소화, 교정시설 등 특수한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은주 올버니 뉴욕주립대 교수는 “‘국가가 부모’라는 법적인 근거에서 부모가 없는 아동,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아동, 학대나 방임을 당한 아동을 국가가 돌보고 양육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뉴욕주의 법 조항을 보면, 부모의 의사에 반해 개입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주 정부가 아이들을 돌볼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육, 의료 등의 권리를 갖고 법원은 친권이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나를 놓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후견인제도 보호아동과 조손가정 아동을 위해 친족 후견인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법 제918조를 근거로 지자체가 아동의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친권 위임 방식으로 시설장과 위탁부모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대가족제도 하에 성립된 법적 부모의 아동보호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고 그 틀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보호대상아동의 적절한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5년 호주제 완전폐지로 대가족제도는 사회적 실재로서만이 아니라 제도로써도 소멸했다. 그러나 친자관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바뀐 게 없다”고 꼬집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020년 11월 기준, 전국에 보호아동이 1만 1천600여 명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 1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으로 즉시 분리제를 발표했지만 임시보호일지라도 원가정에서 긴급하

게 분리된 아동의 권리 역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친권제도와 후견인제도의 입법적 공백은 반드시 보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방안’ 포럼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월 8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분산에너지는 중소규모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자가발전, 에너지저장장치 등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 생산·소비·저장과 잉여전력 해소 등에 기여하는 자원을 말한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분산에너지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다각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분산자원을 모아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발전소, 자발적으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구성원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솔라’ 모델, 분산에너지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의 혼잡도 개선 문제,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관련해 최근 화두로 떠오른 다양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문병철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 과장

은 “앞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분산에너지 특구, 통합발전소 등 분산에너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시장운영과 거래방식 등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재언 충북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해 국민 참여가 가능한 소규모 전력자원을 집합,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재생에너지사업자의 거래형태와 양립 또는 전환할 수 있는 전력시장운영체제나 가상발전소 운영 등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선로 등 전력설비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분산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안재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표발제를 통해 분산에너지 관련 신사업(가상발전소)과 보급,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했다.

안 연구위원은 “기술진보와 생산규모 확대, 유지관리 보수의 효율화를 통해 분산에너지 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부문별 충실한 준비를 통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다문화 정책토론회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대표의원 김민석 의

원)은 9월 9일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다문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초등학교생부터 고등학교생까지 참여했고,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느낀 경험과 정책 제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동초 4학년 한추향 학생은 “정부 지원을 통해 외국인 부모님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현유나 학생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경제적으로 사교육 참여에 제한이 있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센터나 교육기관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문화 2세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문화의 차이, 능력의 차이로 취업이 어려운데, 취업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 다양한 우대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안산선일중에 재학 중인 아덜백, 허 이고리 학생은 동포 학생들의 체류와 학업 문제를 도와달라며 비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고려인 3세까지는 동포 비자(F-4)를 받지만 자녀인 4세는 방문동거 비자(F-1)를 받게 되고, 두 비자의 차이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을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F-4 비자를 받게 된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 전 F-4 비

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고영인 의원과 강민정 의원은 해당 문제에 대한 지적에 공감하며, 법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실행 단계에서 사각지대가 생겼음을 확인하고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진로·진학지도가 미비해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진학과 취업, 비자 변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잘 알지 못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이주민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대의정치가 중요한데, 학교 학생회 중에서도 다문화 학생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김민석 의원은 케네디와 오바마 대통령의 이야기, 미국으로 향한 이민 2, 3세대 동포들이 한국계 하버드 의대 학장을 배출한 이야기를 전하며 “이것이 야말로 여러분들의 미래이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들을 모아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9월 16일 '퇴직연금 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

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후 경제생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퇴직연금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준공적연금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밖에도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각종 의견들이 제시됐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은퇴 후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가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9년까지만 해도 한 해 34조 원이 보험료로 투입됐지만 연금보다는 일시금 수령이 대부분이고, 국민연금이 모든 짐을 떠맡고 있는 현 상태가 지속되면 기금이 30년 내에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그 대안으로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를 제시했다. 준공적연금화란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퇴직연금 급여는 단계적으로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퇴직연금이 노후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낮은 수익률, 무늬만 연금 등 상태에서 다층연금체계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송 박사는 “낮은 수익률의 주된 원인은 기본적으로 투자론 기본원리인 분산투자가 시스템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운용지배구조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기금형 제도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기금형의

핵심은 운용수익률 결정의 90% 이상을 좌우하는 전략적 자산배분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로지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다.

송 박사는 “국민연금 운용위원회가 전문성이 약하다는 대내외 비판에도 불구하고 6%대의 장기수익률을 내는 이유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시스템적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퇴직연금 제도가 노후소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퇴직연금 가입을 하지 않은 근로자가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은퇴연령까지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라며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의무화와 수령이란 산이 있는데, 내년 4월 예정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일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퇴직연금제도는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됐지만, 적립금 대부분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어 저금리 시대 등과 맞물려 수익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노동자의 노후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이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리 윤성혜



국회 본회의,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의결

국회는 8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21건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법안’, ‘군사법원법’·‘국회법’·‘의료법’ 개정안 등 국민 관심 법안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등 쟁점 법안이 처리됐다.

이어 국회는 9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39건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K-반도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 등 미래산업 활성화 법안,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국민 관심 법안 등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회)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 및 자구 심사에 한정돼 있는 심사권한을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가 있어 2021년 7월 23일 여야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체계·자구 심사 중인 법률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체

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법제사법위원회가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완료해 법률안들이 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상임위의 법률안 심사권을 존중하고 국회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회)

법률안은 국회와 행정부간의 이격으로 출장에 소

요되는 시간 및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군 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分院(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회와 행정부간의 이격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군대 내 성폭력·성추행 피해자의 사망사건 처리 전반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관계자 처벌,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고 국방부 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을 설치하며,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을 민간법원의 조직구성과 유사하게 변경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고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를 제한했으며,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상호 협조 의무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부대의 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을 폐지하고, 전시 군사법원의 설치근거와 관할, 재판관으로

심판관 지정·판결의 확인조치 등 관할관의 권한, 전시 군검찰부의 설치근거와 군검찰부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권 등 전시 특례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으로 군 장병이 법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검찰 수사의 독립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은 형사사법절차 전반의 전자화로 형사소송 등 기록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률안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한 전자문서를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간주해 기존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는 등 전자문서에 의한 형사사법절차의 수행의 원칙에 관해 규정했다. 또 형사사법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한 전자문서의 접수·유통·송달·통지·보관·폐기의 원칙과 절차, 전자문서를 통한 영장집행·증거조사 방법 등에 관해 규정했다.

이번 제정으로 형사사법절차의 정보화·전자화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등 사법절차의 신속성·효율성·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피고인·피해자·고소인 등의 권리 보장을 강화해 형사사법 업무 전반에 걸쳐 국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은 2018년 12월에 진행된 OECD 뇌물방지 협약 4단계 이행평가에서 대한민국에 제시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자연인과 같은 수준인 7년으로 연장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제상거래 관련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죄를 저지른 법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은 주택가격의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정됐다.

개정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 공시가격이 11억 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 주택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공제액이 상향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줄어들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법률안은 사립학교 운영의 공정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절차, 징계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개정됐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는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고,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 사무직원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할청의 징계요구 대상자를 학교의 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현재 국가공무원법 수준의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며,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직을 즉시 상실하도록 당연퇴직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관할청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면서 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했다. 교원징계위원회 구성도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외부위원에 학부모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립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공정성 및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학력 보장법안’(교육위원회)

법안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안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교육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한 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장은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학력의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교사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 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에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법률안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해 개정됐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

받는 제도다.

개정안은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교육위원회)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교육을 도입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원격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학교 현장에서 원격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법이 제정됐다.

법안은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재난 상황 등에서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학교장에게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격교육시스템 구축·운영, 원격교육콘텐츠 개발·보급,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구·장비 및 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학교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학습을 지원해야 하며,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충학습 등 별도의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의 장은 다른 국내외 대학 등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인프라 공유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으로 원격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근

거와 교육기관의 역할이 규정돼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거리두기가 가능한 대면 수업 및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고, 성교육·성인지교육·성폭력예방교육을 포괄해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통합적으로 길러낼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의 근거가 미흡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국가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했다.

또 남녀평등교육 증진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의식의 적극적 증진 및 학생의 존엄한 성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화를 위한 기본 근거가 마련되고,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양성평등교육 등으로 분절된 양성평등교육 체계를 종합교육체제로 정비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구글’이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정책을 변경해 앱마켓 수수료(30%)의 적용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중

래 앱마켓 수수료를 적용받지 않던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이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사회적으로 인앱결제 시스템 및 그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부각돼 개정됐다.

개정안은 앱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가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시스템 외의 결제방식을 사용하거나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동의에 따라 인앱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은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으로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민간 분야 데이터 산업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기본법이 필요해 제정됐다.

법안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데이터 생산·결합 촉진 및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운영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 유통·거래 촉진 및 데이터 산업 기반을 조성하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으로 민간분야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과 정책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민간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국가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호한 다중차폐시설 내에 설치되는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는 다른 통신설비에 혼신을 줄 가능성이 적으나,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와 같은 방식으로 준공신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운용할 수 있어, 산업 분야에서 고가의 신규 장비를 도입해도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그 장비를 운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개정됐다.

개정안은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가 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양호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준공신고 후 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시점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반도체 등 제조 산업에서 보다 신속한 장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교통일위원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못지않게 국민적 지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나, 통일 논의가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 조

성 규정을 신설해 지역별로 통일+센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한반도평화증진, 인도적문제 해결과 인권개선 등의 통일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민간단체가 남북교류, 통일교육, 탈북민 정착지원 등 통일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현행법은 노근리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5일 제정됐다.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진상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해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심사를 완료하도록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보행자의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기존의 차량 중심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 교통체제로 전환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자동차관리법’에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도로교통법’에도 자율주행자동차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개념을 현행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해 통행하는 사람으로 확대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를 추가하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각각 확대했다.

이와 함께 보행자 통행방법을 보도와 차도가 구분

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가장자리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각각 통행하도록 보행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의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자율주행시스템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했다.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외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확립을 통해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강화되고, 자율주행시스템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교통질서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경찰관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 소송 수행의 부담으로 인해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

됐다.

개정안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경찰청이 직무의 수행으로 인해 민형사상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찰관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을 수행하더라도 본연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의 폭행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 90%가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취자가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처벌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형법’의 심신장애에 따른 형 면제 또는 감경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취자의 폭행·협박에 의한 업무 방해 행위 처벌을 강화해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조구급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련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문화예술인들(예술계)로부터 공정하면서 성평등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의 요구가 있어 제정됐다.

법률안은 예술인의 범위를 확대해,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전업예술인 외에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기 위해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예비예술인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로 나뉜 2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했다. 1개 위원회로 통합하되 심의·의결 대상 및 특성의 차이를 고려해 2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술인보호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 지정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으로 예술인의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실질적인 지위 및 권리 신장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및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률안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그 질의 제고와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과 관련해 책임을 부여했다. 또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범위·유형 등의 적정성과 우선위탁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에 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으로 재난 등이 발생해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돌봄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대상에 대한 보호 강화(급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경우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등 기존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나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응급 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련병원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및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외부와 엄격히 차단된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었던 환자가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해 환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시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적 구분만으로 권역을 획일적으로 지정

하여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고, 감염병 진단 및 학술 연구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경우에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근거가 없고,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장기간 인수하지 않은 경우 등에 허가를 취소할 근거가 없어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있었다.

개정안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지정 시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권역을 설정하도록 했다.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 허가의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때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감염병전문병원 권역 설정과 민간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사용을 통한 감염병 진단 및 연구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고위험병원체 및 그 취급시설에 관한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환경노동위원회)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범국가적 변화의 기반

을 만들기 위해 제정됐다.

법안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상쇄(넷제로)되는 탄소중립 목표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시하고, 그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법안은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번 제정으로 탄소중립 목표·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다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기간을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로 하고, 일부보증 시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및 배경

기후변화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전 지구적인 대응 강화를 목표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제한하기 위한 ‘파리 협정’이 2021년부터 적용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197개 당사국 모두는 자발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됐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975만 톤 대비 24.4%에 해당하는 1억 7천 318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NDC를 작년 말 UNFCCC에 제출한 바 있으며, 금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됐던 P4G 정상 회의에서는 현행 NDC를 연내에 상향할 것임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해 작년 말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 2030년 NDC 상향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라는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표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현행법령상의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제21대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8건의 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발의됐다. 이후 환경노동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7개월에 걸쳐 5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3회의 공청회 및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고상근 수석전문위원
환경노동위원회

의견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8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안으로 의결했으며, 8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의 내용과 의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내용을 그 의미와 함께 살펴보면 첫째, 전 세계 14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감축목표 수립, 기본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이행점검 등의 체계를 법제화했다. 둘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상향한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이 2030년 NDC를 법률에 명시할지 여부와, 명시할 경우 감축률을 얼마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법안 심사 내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됐다.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선형으로 감축한다는 가정하에 2030년 목표가 37.5%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한다는 입법의지를 표명하고자 35% 이상으로 법제화했다. 셋째, 국가의 주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및 온실가스감축인자예산제도를 도입하고 기후위기 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했다. 넷째, 기존의 화석연료기반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 지역이나 노동자 등의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지원센터의 설립 등 정의로운 전환의 정책수단을 구체화했다.

법 제정 이후의 과제

탄소중립기본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에도, 2030년 감축목표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보다 9%p 상향 조정된 2030 감축목표에 대해 산업계와 주요 경제단체는 단기적으로 기술발전에만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감축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이고,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비추어 너무 낮은 목표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UNFCCC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 감축목표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감축목표 설정 과정에서 탄소중립에 관한 합의제 의사결정체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시민사회, 종교, 청년, 교육, 노동, 산업계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 법이 30여 년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동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021 러시아 총선 관전기



류승우

국회 러시아 주재관

지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에 걸쳐 제8대 러시아 하원 구성을 위한 총선이 치러졌다. 아직 공식 결과발표 이전이지만 집권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하원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개헌 이후 첫 총선이라는 점과 이번에 구성된 하원은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선거였다. 제8대 하원 선거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고 총선과정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 및 러시아의 이색적인 투표방식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8대 하원 선거 결과

러시아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며, 상원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각 1인을 추천해 구성하고, 하원은 일반 국민투표를 통해 구성된다. 450명 정원의 하원은 선거구별로 직접 선발하는 지역대표 225명,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225명의 비례대표로 구성된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지난 2016년 제7대 하원 선거(47.88%)보다 다소 높은 투표율인 51.68%를 보였으며, 투표결과 원내진입 기준인 5%이상 득표한 정당은 '통합러시아당', '공산당', '자유민주당', '공정러시아-애국자-진실을 위하여당', '새로운 사람당' 순으로 득표했다. 225개 지역구중 198개 지역에서 통합러시아당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공산당 9개 지역, 공정러시아-애국자-진실을 위하여당 8개 지역, 자유민주당 2개 지역, 비교섭 단체 및 무소속 8개 지역 순으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번 선거결과와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집권여당의 의외의 선전, 새로운 원내 정당의 탄생, 공산당의 약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8대 하원 선거 결과〉

구분	통합러시아당	공산당	자유민주당	공정러시아-애국자-진실을 위하여당	새로운 사람당
득표율 (지난 총선 득표율)	49.82% (54.2%)	18.93% (13.34%)	7.55% (13.14%)	7.46% (6.22%)	5.32% (신규 정당)
의석수 : 지역/비례 (지난 총선 의석수)	324석 : 198/126 (343석 : 203/140)	57석 : 9/48 (42석 : 7/35)	21석 : 2/19 (39석 : 5/34)	27석 : 8/19 (23석 : 7/16)	13석 : 0/13

※ 8개 지역구에서 비교섭 단체(3명) 및 무소속 후보자(5명) 당선

현 집권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코로나 19 상황의 장기화, 서방제재에 따른 경제악화 등으로 30%대의 역대 가장 낮은 지지율로 선거를 맞이했고, 개헌 정족수인 300석 이상 확보가 이번 선거의 목표였다. 투표 결과 정당 지지율보다 높은 득표율(49.82%)을 기록했고, 지난 총선보다 다소 의석을 상실하긴 했으나 목표를 상회하는 324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러시아 선거법은 정당투표에서 5%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를 배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총선을 거쳤음에도 러시아 하원은 줄곧 4개 정당체제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운 사람당'이 5.3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새롭게 원내에 입성하게 됐다. 기존 야당과 마찬가지로 신생 정당인 '새로운 사람당' 역시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져 있어 대정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1야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던 공산당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정당득표율(18.93%)을 달성했다. 이는 공산당이 노력한 결과라기보다는 최근 투옥된 시민운동가 나발니측에서 주도한 'Smart Voting' 운동의 결과라는 평가다. 'Smart Voting' 시스템은 여당 후보에 대항할 유력 야당 후보를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공산당 후보를 가장 많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거 과정의 특징

이번 선거과정에서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야권 후보자에 대한 출마 방해 행위가 노골적이었던 점이다. 과거에는 유력 야권 후보자 출마저지 수단으로 후보자 등록을 위한 필수요건인 유권자 동의서(유권자 3%이상의 서명)의 검증 지연을 통해 자연스레 후보 등록을 무산시키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이외에도 야권 후보자가 속한 단체를 극단주의 단체(극단주의 단체 소속 및 협력한 자는 공직후보로 출마 불가)로 지정해 출마를 원천 봉쇄하거나, 이들 소속이 아닌 경우 해당 단체와 협력했던 이력을 이유로 후보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력 야권후보자의 등록을 원천 차단했다. 또한 헌법에 규정된 '공직자 해외 자산 보유 금지' 규정을 통해 해외자산 보유 야권 후보의 등록을 취소한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후보 등록이 무산된 유력 야권 후보자의 수는 대략 250여명 수준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Smart Voting' 홈페이지 폐쇄, 애플과 구글에 관련 어플리케이션 삭제 요청 및 주러 미국대사 초치(미국회사의 러 선거개입 혐의), 유력 야권 후보와 동일한 이름, 유사 외모를 지닌 후보자 등록 허용 등 정부차원의 개입이 다반사로 이루어졌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6년 총선과 비교해 선거위반행위

가 1.5배 감소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총 54개 투표소 8천500여 장의 투표용지가 무효 처리되었고, 묶음 투표용지 투기(12개소), 투표보관함 훼손, 투표용지 보관 부실, CCTV 오작동, 투표감시원 활동 방해, 직장인 강제 투표 동원 등의 위반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자를 조치하기도 했으나 대다수 사례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색적인 투표 방식

러시아는 다양한 투표 방식을 공식 투표에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기표소 투표방식 외에 자택투표, 온라인 투표, 사전투표, 이동투표, 전자투표 등의 다양한 투표방식을 공식 투표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자택투표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를 위한 방식으로 자택투표를 신청한 자는 공식 투표일 이전에 우편을 통해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투표 당일 선관위 직원이 직접 투표함을 들고 자택에 방문하여 수거하는 방식이다. 대략 4만6천 명 정도가 자택투표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대리투표의 위험이 높은 방식이고, 신청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투표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핸드폰을 통한 본인 인증과정을 거쳐 실시되며, 공식투표기간 중 24시간 투표를 가능하다. 총 7개 지역에서 실시되어 280만 명(전체 유권자 2.6% 수준) 정도가 참여했다.

사전투표(5만여 명 참여)는 북극 등 36개 오지의 거주민이나, 해외 체류자, 항행중인 선박의 선원 등을 대상으로

로 실시하는 투표 방식이며, 공식투표일 15일전부터 공식투표일 직전까지 조기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투표 방식은 헬기 등을 이용해 오지나 선박에 투표용지를 배송하고 현장에 텐트 등으로 임시 투표소를 설치한 후 투표를 실시한다.

이동투표(330만 명 참여)는 등록된 주소의 투표소가 아닌 다른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식이다. 사전 신청을 한 경우 가능하지만, 지역구 출마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불가능하고 정당에 대한 투표만 가능하다.

전자투표는 2가지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키오스크 방식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투표하는 방식(EVS : Electronic Voting System)과, 자동 개표가 가능한 별도의 투표용지를 통해 투표하는 방식(OSVS : Optical Scan Voting System)이다. EVS 방식은 14개 지역, 671개 투표소에 사용되었고, OSVS 방식은 39개 지역, 5천480개 투표소에서 사용됐다.

이제 선거는 마무리되었고 조만간 제8대 하원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다. 제8대 하원은 지난해 개헌을 통해 새롭게 부여된 강화된 의회권력(총리 및 장관 후보자 승인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집권여당은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점하고 있고, 친정부 성향의 야당, 현 볼로딘(Volodin) 하원의장의 의장직 유지 예상 등 하원의 역학구도는 현재와 유사할 것이고 정부와의 협력관계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볼로딘 하원의장, 아난스키(Anaskih) 하원 부의장, 슬루츠키(Slutskiy) 하원 외교위원장 등 친한파 의원 대부분이 생환했다는 점에서 제8대 하원과 대한민국 국회의와의 관계 강화를 기대해 본다. 🍵



‘수크령’

은빛 솜털이 보송보송해 마치 강아지풀처럼 보이는 이 풀의 이름은 수크령입니다. 가을의 길목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여러해살이풀로 우리나라의 토종 식물입니다. 수컷그령이라는 뜻의 수크령은 역센 뿌리가 사방으로 잘 뻗어 경사면 같은 곳에 심으면 토양의 유실을 방지해줍니다. 꽃말은 ‘가을의 향연’이며, 사자성어 ‘결초보은(結草報恩)’의 풀이기도 합니다. 또 벼가 여물 때를 알려준다고 해 ‘가을의 전령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

글 고영선 사진 임진완

국회 간행물의 심미성·통일성 확보 위한 표준 디자인 개발

국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은 국회의 업무 수행 내용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 중 하나다. 간행물을 통해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입법활동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은 종류가 200여 개 이상임에도 디자인은 제각각인 상황이다. 또한 국회 이외의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도 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어, 수요자인 국민은 국회에서 발간한 간행물임을 한눈에 인지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2020년 10월 ‘국회 디자인 개선 TF’를 구성하고, 정진열 국회디자인자문관(국민대 교수)을 위촉해 간행물 디자인 개선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국회 디자인 개선 TF’의 가장 큰 목적은 디자인 개선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국회의 간행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국회소속기관 모두 통일성 있는 형식을 사용해 국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기관별로 고유의 색상을 부여해 발행 주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었다.

‘국회 디자인 개선 TF’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해 디자인 레이아웃부터 커뮤니케이션 마크, 상징문양 적용을 위한 개선 방안, 디

자인 적용을 위한 규정 제정 등 다양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특히, TF 단장인 전상수 입법차장의 진두지휘하에 각 기관들의 적극적 참여로 국회 최초로 ‘간행물 표지 디자인’을 개발했다.

간행물마다 상이한 표지 디자인 규격화

국회 간행물 디자인의 가장 큰 변화는 간행물마다 상이했던 표지 디자인을 규격화한 것이다. 간행물의 특성에 맞게 정보, 이미지 등을 삽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주되, 기관명, 기관별 상징문양, 국회 커뮤니케이션 마크 등 공통적으로 삽입되는 정보의 위치를 지정함으로써 국회 간행물의 통일성을 확보했다. 통일적인 디자인은 국회 간행물에 대한 인식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지 디자인 예시 : 국회 간행물 표준 디자인 가이드

기관별 고유의 색상 지정

기관별로 고유의 색상을 지정해 시인성 또한 확보했다. 각 기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표지 색상을 정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멀리서도 한 번에 국회소속기관이 발간한 간행물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각 기관별로 같은 계열의 명도가 다른 두 색상을 지정해 연도별로 번갈아 사용함으로써 색상 통일에 따른 단조로움을 줄이고 어느 해에 발간됐는지 보다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간행물의 새로운 시작이 되다

국회소속기관이 그동안 발간해오던 간행물의 양식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새로운 디자인을 입히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그러나 1년여간 국회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하에 열심히 작업해 도출한 결과물은 만족스러웠다. 고유한 표지 디자인 전체에 색상을 입혀 다른 국가기관 간행물과 차별화함으로써 수요자 접근성이 향상되고, 간행물을 발간하는 공급자인 국회의 입장에서도 표지 디자인을 고민할 필요 없이 주어진 양식하에서 쉽게 발간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간행물 디자인 개선 작업은 국회 간행물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발전을 통해 국회 간행물 디자인이 공고히 뿌리 내려 간행물 발간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글 최은제 사무관(문화소통담당관실 문화소통담당)



침체된 화훼산업을 살리는 법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20.8.21.)

1990년대 중반 고소득 작목으로 알려지면서 2005년 판매액이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한 화훼 산업은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와 화훼 수입의 증가 등으로 빠르게 위축돼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 등이 취소, 축소되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침체된 화훼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제정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화훼산업법’)이 시행 1년여를 맞았다. ‘화훼산업법’의 제정 이유와 내용, 성과 및 보완점 등을 알아봤다.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성과

‘화훼산업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대안으로 2019년 8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2019년 8월 20일 공포, 2020년 8월 21일 시행됐다.

농해수위는 ‘화훼산업법’의 제안 이유에 대해 화훼산업이 IMF 이후 FTA 체결, 경기침체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

라 축소되고 있는 반면 화훼수입은 꾸준히 증가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 화훼산업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훼, 화훼산업, 화훼문화 등에 대한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고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통한 추진 체계 확립,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을 통한 생산·유통체계 개선,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등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훼산업법’은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재사용 화환을 표시토록 한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했다.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의 표시,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온라인 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몰에도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미 표시, 거짓표시 등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1회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이상 1천만 원으로 구체화했다.

‘화훼산업법’ 시행 이후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됐다는 점이다.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법 제정 직후인 2019년 만들어졌고, 지난해 법 시행 이후 대폭 보완돼 화훼 유통 관련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공판장별 거래 현황을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을 설정해 품목별·품종별 거래 현황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화훼공판장 6곳의 거래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법에서 정하고 있는 화훼산업 진흥지역과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해 경쟁력 있는 화훼생산기반을 마련하고, 화훼문화 진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홍보를 해나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화환제작업체 등 1만 8천946개소를 계도 홍보하고, 일제 단속 등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 마련 서둘러야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와 화환 유통질서의 개선을 위해 법이 제정됐지만 법 시행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생화 재사용에 제동이 걸리자 저렴



코로나19로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화훼상인이 꽃들을 진열하고 있는 모습

한 조화를 다량 섞어 제작단가를 낮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화훼업계는 ‘화훼산업법’에 화환의 정의에 조화 비중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윤식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장은 “우리 농가가 ‘화훼산업법’에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이 법이 단순히 산업지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화훼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 생산 농가와 유통에 대한 통계,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하루 하루 지치기 쉬운 요즘, 일상에서 손쉽게 싱그러운 생명력을 느끼기에는 반려식물만 한 것이 없다”며 “‘화훼산업법’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위한 법이다. 국민들이 구매하는 꽃 한 송이가 화훼농가에 많은 힘과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

글 고영선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법제사법위원회 2021년 8월 24일 의결

본회의 2021년 8월 31일 의결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국회, 아프간 평화정착 결의안 의결, 대법관 청문회 등 개최

국방위, 넷플릭스 드라마 'D.P.' 관련 병영문화 논의

9월 8일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 전체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넷플릭스 드라마 'D.P.'와 관련해 “조금 극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지금 현실과 다르다”며 병영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홍영표 위원(더불어민주당)이 “D.P.라는 드라마를 들어봤나. 전 세계에서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다. 저도 다 봤다. 거기에 대해 장관님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라고 묻자 이 같이 답변했다. 홍 위원은 “물론 픽션(소설)이지만 2014년 윤일병 사건을 토대로 국내의 잘못된 병영문화를 다뤘다”며 “국방위원으로서 보면서 참 부끄럽고 참담했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은 드라마를 보고 얻는 교훈이 있을 것이라며 서 장관에게 시청을 권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군대 문화를 만드는 교훈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 장관은 “드라마 속에 비춰진 부분처럼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볼 중요한 계기가 됐다. 군 지휘관이 선진 병영문화를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군무이탈 체포조(D.P.)가 탈영병을 쫓는 과정을 그린 이 드라마는 2014~2015년 제작된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논의

9월 9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 전체회의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들의 분담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그간 업계에서는 기금이 변화한 미디어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채, 부적절한 사용처에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준호 위원(더불어민주당)도 국악방송과 아리랑TV에 지원되는 발전기금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 위원은 “아리랑TV 정규직 직원들 평균 연봉이 6천600만 원 이상이 되고, 신입사원 초봉도 3천100만 원”이라며 “기금이 현재 아리랑TV 350억 원, 국악방송에 67억 원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화한 미디어 시장 환경에 맞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에 지원할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매년 노력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면서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에 가짜뉴스의 기준을 마련하라는 허은아 위원(국민의힘)의 주문에는 “(뉴스가) 허위냐 아니냐를 판단할 문제지 어떻게 가짜뉴스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외교통일위,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 등 의결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는 9월 10일 전체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과 ‘일본 정부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 등을 의결했다.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은 이용선 의원과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 2건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이 결의안은 탈레반으로의 정권 이양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동반 퇴보를 부를 수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탈레반이 모든 폭력행위를 중단하고 공언한 대로 여성인권 및 인간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대한민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 인권 보장, 난민 보호를 위해 책임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은 강제노역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역사적 사실 왜곡을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9월 15일 국회에서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법원은 판결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평화의 지점을 발견해야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며 “법관으로서 지켜왔던 초심과 소명을 잊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또 “젠더법 연구회와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법과 제도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갖춰야 할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다”며 “재판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창원시 부시장 지원으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정치 편향 오해) 소지를 드러 송구하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의 남편인 이모 변호사는 지난해 2월 판사 신분으로 창원시 제2부시장직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 당시 현직 판사가 이 자리에 지원한 것이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오 후보자는 “판사 사직과 지원이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 당시에 사직서가 그렇게 늦게까지 수리가 안 될지 예상 못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며 (부시장)직은 정치로서 하는 직업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제2부시장직이 정무직 부시장이라는 지적에는 “저는 아직도 (제2부시장 직이) 정치인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변호사가 최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것에는 “수임 이후에 알았다. 피고인 입장에서도 훌륭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남편에게 변호사 사임계 제출을 권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형동 위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오 후보자는 “그 부분은 남편의 영역이며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직권 없이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법리에 대해 “국민 법 감정에 맞게 처벌 기준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중 핵심 권리”라며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과 관련, 대법원 선고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취지에 맞춰 (하급심에서도) 법적 해석의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여야 합의를 거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NEWS

National assembly review

박병석 국회의장, 국군의무사령부·수도병원 위문 방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추석을 앞둔 9월 17일 경기 성남에 있는 국군의무사령부와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신속하게 군대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최선의 지원을 해줘 감사하다”면서 “부상 장병에 대해 최대한 시간에 최적의 진료를 하겠다는 각오를 보여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들이 마음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국군의무사령부가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도 관심을 갖겠다”며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으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공로가 있다”고 말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작년 1월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전군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치료를 전담하면서 인cheon항검역소, 생활치료센터 등에 코로나19 의료인력을 파견해 민간인 치료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군의무사령부 장병들을 격려한 박 의장은 국군수도병원으로 이동해 병원에서 근무 중인 요원 등을 격려했다. 박 의장은 “최근 중상을 입은 장병의 초기외상소생술을 27분 만에 마쳐

다니 젊은 장병들을 살려내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외상치료시스템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날 박 의장의 방문에는 최병섭 국군의무사령관, 석웅 국군수도병원장,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고윤희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국민통합을 위한 헌정제도 개편 세미나’ 개최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춘석)는 9월 16일 국회 접견실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헌정제도 개편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사무처와 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법학회·한국정치학회·대화문화아카데미가 공동주관하고 한국방송공사(KBS)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여야 및 각계 전문가와 함께 헌법과 정치제도의 문제를 논의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현행 헌법은 만들어진 지 34년이 지났지만 시대의 변화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승자독식의 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 타협의 문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세미나 발제자로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함께 학계·언론계 전문가 8명이 참여

NEWS

했으며, '갈등극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헌정제도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자들은 현재 한국사회의 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으로 대통령과 행정부로의 권한집중(강원택·박명림 교수, 김관기 변호사), 선거제도의 불비(김진국 대기자, 박명림 교수) 등을 지적했고, 이러한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총리 주도의 내각 역할 강화(김진국 대기자, 강원택 교수), 선거의 비례성 확대(강원택 교수, 김진국 대기자), 국회의 권한과 역할 확대(김관기 변호사, 박명림 교수), 합의제적 민주주의 도입(임성학 교수)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현재까지의 개헌논의가 결실을 이루지 못한 것은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하거나, "헌법개정의 주체는 국민이므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숙의를 거쳐 개헌이 진행되어야"(김도읍 국민의회 정책위의장)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방청객 없이 진행됐으며, 국회방송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2022년도 예산안 인쇄물 지난해 대비 36% 감축, A4 용지 200만 장 절감 효과

국회는 9월 3일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을 접수했다. 예산안 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8.3% 증가한 604.4조 원 규모이며, 국회사무처는 접수한 예산안 및 첨부서류를 각 의원실과 위원회 등 관련 부서에 배부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접수·배부하는 예결산 관련 서류의 인쇄물을 국회의원실 수요조사를 통해 대폭 감축했는데,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서류의 인쇄물은 총 300부(1부당 87권)로 지난해에 비해 약 36% 감소한 분량이다. 절약된 종이는 A4용지 약 200만 장으로, 이는 1톤 트럭 6대분에 해당한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예산안 관련 인쇄물 감축을 시작으로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국정감사 과정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도 종이 인쇄물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전자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결산 관련 서류는 접수되는 즉시 의안정보시스템·입안지원시스템 등 국회 전산망을 통해 국회의원실과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며, 누구든지 자료 파일을 확인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 혁신 스타트업 '피스컬노트'와 교류·협력 강화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9월 14일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으로서 명성이 높은 '피스컬노트(FiscalNote)'의 창업자인 팀 황(Tim Hwang) 대표의 국회도서관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스컬노트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각국의 법안과 규제정보를 분석해 글로벌 기업 등에 제공하는 혁신 스타트업이자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서, 팀 황 대표는 '포브스(Forbes)'의 '30세 이하 유망주 30인', 세계경제포럼의 '기술 선구자'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 8월 26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제19차 '시와 국회포

럼'에서 팀 황 대표는 '전 세계 법을 한번에'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 바도 있는데, 양 기관 간 교류·협력을 위한 후속 조치로 국회도서관을 직접 방문했다.

이날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팀 황 대표와의 면담에서 "최근 국회도서관에서는 '국회회의록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동번역' 등 AI 기반의 다양한 입법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피스컬노트의 입법 및 정책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AI 분석 기법을 국회도서관의 입법지원서비스에도 활용하고 접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팀 황 대표는 "피스컬노트는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도 적극 진출할 계획으로 지난 수십 년간 국회도서관이 축적한 입법 및 정책자료의 디지털 전환 경험은 한국에서의 법률서비스 모델 개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양 기관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앞으로, 국회도서관과 피스컬노트는 양 기관 모두에 도움이 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협약'(MOU) 체결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도서관, '제19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개최

한국학술정보협의회(회장 현진권 국회도서관장)는 9월 9일 국회도서관에서 '도서관의 D.N.A.(Data, Network, AI)'를 주제로 '19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행사로 진행됐지만 협의회 회원기관들의 높은 온라인 참여도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가상스튜디오에서 XR(확장현실)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중계됐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현재 5천750개



도서관(대학도서관 421개, 전문도서관 876개, 공공도서관 794개, 학교도서관 3천659개)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전자도서관 협의체로, 매년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를 통해 최신 정보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사업을 논의한다. 협의회는 2002년 발족한 이래 올해 5천번째 협력 협정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국가지식정보의 허브로 성장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축하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콘퍼런스에 참여한 도서관인들을 격려하며, "코로나19로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고 도서관이 이런 사회 변화에 발맞춰 지식전달체계를 혁신하는 선두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협의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 기관들에게 국회의장상 등 공로상 시상이 진행됐다.

이번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는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의 '국회도서관의 D.N.A.'와 이광형 KAIST 총장의 'AI Metaverse 시대의 국가전략'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3개의 세부 주제 '도서관, AI About Data', '플랫폼이 바꾸는 세상', 'AI 기술, 어디까지 왔나'를 발표하는 콘퍼런스가 개최됐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변화하는 정보기술 환경 속에서 다양한 '대안 미래'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도서관의 DNA는 어떠한가 하는가를 고민할 때"라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이런 고민과 지식정보 공유를 위해

NEWS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지방재정 해설서인 '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을 발간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자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해다. 지방자치가 본격



적으로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일부이자 중앙정부와 구분되는 지방정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확대되고 있는 복지예산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주민을 밀착 지원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24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의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처음 발표된 2013년 154.4조 원에서 2021년 259.4조 원으로 증가했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부 간 재정관계는 중앙정부 중심의 불균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추어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지방이양일괄법' 개정 등을 추진해 재

정분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정부는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총 3부(제1부 지방재정의 현황, 제2부 지방재정의 성립과 관리, 제3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해)로 구성돼 있으며, 2021년 예산 및 2020년 결산 기준으로 통계자료를 최신화하고, 재정분권 이행경과 등 주요 지방재정 관련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설계와 집행 과정을 분석·평가해 개선과제를 도출한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를 발간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저출산 대책을 추진



하고 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국비 기준 2006년 1.0조 원에서 2021년 42.9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합계출산율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2018년부터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추진 현황을 해외 사례와 비교해 살펴보고, 정책의 설계, 집행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은 초기 2006년부터

2015년(제1~2차 기본계획)까지는 자녀양육가구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2016년(제3차 기본계획)부터 청년의 일자리 및 주거지원 등이 본격적으로 대책에 포함됐고, 2021년 기준으로는 청년 지원 예산이 전체 저출산 예산의 6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의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저출산 대책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저출산 대응과 관련된 세부 예산을 구별해내는 것이 어려워 관련 없는 예산까지 저출산 예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저출산 예산에 포함되는 사업이 매년 변경됨에 따라 저출산 예산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저출산 정책의 범위를 핵심과제 중심으로 설정해 정책 수단의 합목적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기존 정책을 차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추진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출산 대책 수립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하고 있으나 정책에 대한 책임 주체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 등 행정부처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과소군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비대면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홍)는 지난 9월 9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간담회 시리즈 2: 과소군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특히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소멸위기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소멸위기 현상은 기존의 지방행정체제와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에서는 지방소멸위기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3회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를 기획했다. 그리고 이번 간담회는 제2회로 '과소군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회의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고, 간담회 전문가로는 강원대 정정화 교수가 발제로 참여했으며, 행정안전팀의 하혜영 조사관과 국토해양팀의 김예성 조사관이 토론을 맡아 진행했다. 발제자는 과소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했다. 과소지역이란 인구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인구가 장기간 감소하고 있는 군(郡) 지역의 행정체제와 구역을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과소군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행정구역의 통·폐합이 고려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높지 않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과소군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읍면자치를 부활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과소군의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변경하는 대안도 제안했다. 올해 1월에 '지방자치법'이

NEWS

전부개정되면서 주민투표에 의해서 집행부-의회 간의 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지방소멸 위기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라고 인식했으며, 향후 지방소멸 위기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지방행정체제와 구역개편 등도 연계해서 과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회입법조사처, ‘우리나라 공공외교 현황과 개선 과제’ 비대면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는 9월 10일 ‘우리나라 공공외교 현황과 개선 과제’를 주제로 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공공외교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대면 줌 회의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가 기조발제자로 참여했고,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원장, 최아진 연세대 교수, 이민홍 외교부 공공외교총괄 과장이 발제를 맡아 공공외교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김태환 교수는 ‘한국 공공외교 현황과 진단, 방향성’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공공외교가 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국의 외교정책 목표와 국익에 이바지하는 외교 행위로 인식됐다면, 상호작용(소통, 관여, 관계 구축)을 통해서 공유하는 의미의 확립과 확산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인택 원장은 ‘수용자 맞춤형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대상국에 대한 이해, 맞춤형 사업개발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미 공공외교가 그동안 워싱턴 싱크탱크와 대학 캠퍼스에 치중했다면, 미 전역을 상대로 주별, 시별 공공외교가 전개돼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공공외교의 활용이

불가피함을 지적했다.

최아진 교수는 정책 공공외교와 문화 공공외교의 융합, 엘리트와 전문가 중심에서 일반 국민들로의 대상 확대, 쌍방향 가치와 이익의 공유, 예산 확대, 평가시스템 개발, 국내적 합의 구축, 민간 주체 역할 확대, 국가 및 지역 등 대상 기관의 확대 등을 공공외교의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이민홍 과장은 2010년 공공외교 원년이 선포된 이후 공공외교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의 전개과정을 소개하면서, 공공외교 사업의 중복성 및 예산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공외교위원회의 조정 권한 강화와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개선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반적으로 공공외교가 정부외교, 경제외교와 함께 외교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우리의 정책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공외교 전략과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정책에 대한 국내적 합의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은 초당적 논의와 지지가 필요한 것이므로, 성공적인 공공외교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의 참여와 노력이 연계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26·27호 발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26호(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제27호(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를 발간했다.

‘국가미래전략 Insight’ 26호 저자인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중장기계획 중 고용 및 평생학습 영역의 전직지원서비스 정책에 대한 이슈를 도출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본 보고서에서 주요 정책 이슈에 따른 정책 방향으로는 좋은 일자리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정책 설계, 정책수단 간 상호 유기적 연계를 통한 체계성 향상, 적절한 정책 성과목표 및 지표 활용, 재취업 및 전직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증진을 제시했다.

27호 저자인 여영준 부연구위원, 조해인 부연구위원, 정훈 연구위원은 탄소국경조정을 무역규제조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국내 산업구조 및 에너지시스템 전환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추진점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연구진은 분석을 통해 '30년 EU 탄소국경조정 전면 도입 정책충격에 따른 국내 산업 총 부담액을 약 8조 2천456억 원 규모로 예측했다. 그리고, 저탄소 정책 시행에 따른 기술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효과적 이행 등을 가정한 복수의 정책 시나리오에서 '30년 탄소국경조정 전면 도입에 따른 산업 총 부담액이 약 11.7~ 15.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중장기 4대 목표 및 12대 핵심 아젠더 공개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공동위원장 성경룡·정해구·김복철)는 9월 14일 국회 접견실에서 개최된 '가칭' 미래비전 2037'의 중간보고회를 통해 향후 국가적 차원으로 집중해야 할 중장기



4대 핵심 목표를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개된 '가칭' 미래비전 2037'이 제시한 4대 목표는 역량사회와 삶의 질, 성숙사회와 균형발전, 지속성장과 경제패러다임 전환, 국내외 갈등 조정과 협력이다. 목표별 세부 12대 핵심 아젠더는 ①교육 혁신, 생애 설계와 평생학습 사회, ②안전한 사회, 건강한 국민, ③기본적인 삶,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④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⑤격차와 차별 없는 사회, ⑥일과 삶이 조화로운 사회, ⑦과학기술혁명과 디지털 전환, ⑧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⑨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 전환, ⑩갈등 조정과 미래기획을 위한 정치, ⑪전환질서 속의 국제 전략, ⑫한반도 평화 구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야 지도부 및 각 당의 대선후보들과도 대화와 토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권위있고 완성도 높은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신임 이사장에 대한 공동위원장 위촉식이 진행됐으며 국가중장기 아젠더위원회는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등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전략 마련이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연구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지난 2020년 11월에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

“국회와 언론 사이의 소통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



유연제 사무관
공보기획관실 언론담당

Q 국회에서 근무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저는 입법고시를 통해 국회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 시험 준비를 할 때에는 국회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공직에 종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대학 때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관련 일들을 하면서 공익을 증진할 수 있는 일들에서 제가 더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고시공부를 시작해 운 좋게 입법고시에 합격했고,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 합격한 뒤에는 ‘앞으로 법안이나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함께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공보기획관실의 업무와 담당하고 계신 일들을 소개해주세요.

A 공보기획관실은 홍보 측면에서는 국회 입법·정책 활동에 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보도자료 배포·SNS 홍보 등을 실시하고, 대언론 측면에서는 국회 관련 언론보도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신속히 대응하고 국회청사 내 취재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저는 언론담당 업무를 하는데요. 가장 주된 업무는 국회 출입기자 등록 및 관리입니다. 국회에는 약 1천600명 정도의 출입기자가 등록돼 있는데, 행정부처의 경우 출입기자 규모가 큰 곳이 100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많은 기자분들이 출입등록을 하고 취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자분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응대할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취재진이 과도하게 몰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재질서 유지 차원에서 기자단 풀을 구성하고 포토라인을 설치하는 등의 업무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는 아무래도 공보기획관실이 국회와 언론 사이의 소통 통로

역할을 하다보니 출입기자분들과 좋은 관계를 쌓는 것도 제 업무 중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최근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업무도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A 제가 올해 초에 공보기획관실로 오게 되어서 코로나19 이전의 언론담당 업무를 해본 적이 없긴 하지만 이전 업무 방식에 대해 들었던 것에 비추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의 가장 큰 변화는 매번 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마다 기자단 풀을 구성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국회 내 큰 행사가 있을 때에만 기자단 풀을 구성해 인원을 제한하고, 본회의와 상임위 전체회의 등에는 국회 출입기자로 등록돼 있으면 자유롭게 회의장에 출입해 취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장 내 밀집도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회의장 내 기자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방역대책 단계에 따라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출입기자 명단이나 기자실 이용 현황에 대해서는 국회 재난대책본부보다는 공보기획관실이 더 상세히 알고 있다 보니, 출입기자 중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역학조사 결과를 전달받아 접촉 가능성이 있는 기자분들에게 PCR검사를 요청하고 검사 결과를 재난대책본부에 공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다보니 저는 공보기획관실에 오고 첫 오후반차를 쓴 날 퇴근했다가 상황이 발생해서

두시간만에 다시 돌아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Q 공보기획관실의 주요 현안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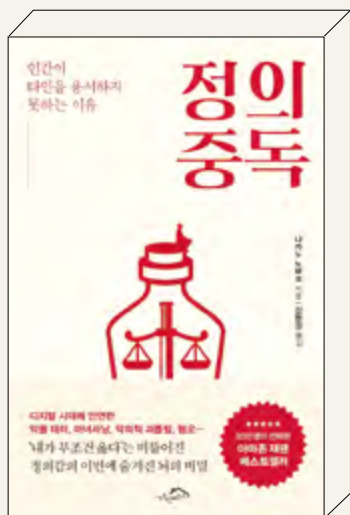
A 최근 공보기획관실에서는 국회 출입기자 등록제도 정비와 ‘일하는 국회’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입기자 등록은 상시(2년)와 장기(1년)로 구분되는데요. 그동안 국회는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활동 보장을 위해 출입기자 등록제도를 개방적으로 운영했지만 문제점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등록기준을 재정비해 작년에는 장기 출입기자 등록제도를 개선했고, 올해는 상시 출입기자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일하는 국회’를 알리기 위해 상임위마다 미디어지원관을 배정해 상임위에서 처리되는 법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홍보를 활성화하는 것도 공보기획관실의 역점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 중의 하나는 ‘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넘어보자’라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처해 있는 주변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새로운 일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분야가 무한정하다 보니 업무를 하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마주할 수 있어 국회라는 직장도 제가 목표로 하는 바를 달성하는 데 더없이 좋은 환경인 듯합니다. 나중에는 제 관심 분야가 생겨 더 몰두할 수 있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다양한 일들을 해나가자’라는 것이 저의 포부입니다. 🍯

글 김영선 사진 임진완

정의 중독 : 인간이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저자 | 나카노 노부코(동일본국제대 교수)

역자 | 김현정

출판사 | 시크릿하우스

출판일 | 2021. 5.

‘인간이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의중독’이라는 제목과 함께 표지에는 이 책에서 탐색하려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정의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책 전반의 논조다. ‘용서’는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분노를 버리

고 긍정적 의미를 찾는 과정이 바로 용서다. 그런데 저자는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상정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룬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나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격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행동하는 이유를 다루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책은 용서가 아니라 ‘인간이 타인을 용인 내지는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를 탐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주요한 의사소통 수단의 하나는 SNS다. SNS는 자신을 표현하는 한 수단일 뿐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면서 소통을 촉진하는 주요한 수단이 됐다. 그런데 순작용이 있으면 역작용이 있듯이 SNS에서는 집단적인 의견 충돌과 갈등 내지는 악플과 집단적 가해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익명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그 뒤에 숨어서 타인을 공격하는 행동을 촉진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와 성별, 연령이 다르고 소속과 출신 배경이 다른 사람, 계층이 다를 뿐 아니라 생각과 태도가 다른 사람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공간에서 타인과 타인의 의견을 인정하고 이해하려 한다면 좋으련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그것은 틀렸

어. 내 의견이 맞아!’라고 주장하게 되었을 때 이 공간에서의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한동안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 지 나와 ‘틀린’ 사람이 아니라는 캠페인이 있었던 기억이 있다. 내 생각과 내가 지향하는 바와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틀린’ 생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틀린’이라는 말이 지닌 부정적 의미가 갈등과 배척 및 차별을 일으킬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을 ‘틀린’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말자는 것이었다.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틀린 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 ‘틀렸다’는 말에는 나는 옳고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의미를 저변에 깔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 ‘공정’이라는 말이 시중에 크게 회자되었을 때,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 남자와 여자, 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에 생각한 ‘공정’의 정의는 매우 많이 달랐다. 정의롭다는 판단은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과 공간, 상황에 따라서 정의로운 것은 변할 수 있다. 그런데 나의 생각이 정의이고 나와 다른 생각이나 태도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태도일 수 있음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나와 다른 타인을 경계하고 옳지 않은 대상으로 배척하려는 성향은 인간의 고유한 속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를 뇌과학이나 심리학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의 지리적 상황이나 역사적 상황으로 인한 폐쇄적인 문화풍토 속

에서 타인을 경계하고 동질집단 속에 동화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존전략이었음을 설파하고 있다. 낯선 사람을 소개받고 나면 고향이 어디이고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궁금해하면서 질문하는 우리의 대인관계 패턴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공통적인 출신 배경을 찾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더 많은 공통점을 찾으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왠지 불편해하고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고 경원시하지 않았던가 반성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정의 중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익숙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새롭고 도전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가라고 저자는 권한다. 가끔은 불안정하고 혹독한 상황에 자신을 내던질 때 뇌의 전두전야(前頭前野)가 자극되어 젊고 탄력 있는 사고와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새롭고 도전적인 상황에 노출되면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상황을 다르게 생각할 기회가 생기지 않던가? 최근 노화와 관련된 연구 결과도 혹독하고 새로운 환경에 노출될수록 노화의 시계라고 하는 텔로미어라는 유전물질의 길이가 짧아지는 속도가 늦어진다고 하는데,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노화도 늦출 수 있다면 돈을 주고서라도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이 책은 항상 올바르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일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비판해온 나에게도 ‘정의에 중독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한다. 🍵

글 현명호(중앙대 심리학과 교수, 심리학 박사)

아프가니스탄 바미얀 불교 유적을 조성한 에프탈 왕국



아프가니스탄은 힌두쿠시(Hindukush) 산맥으로 이루어진 산악국가다. 그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 술한 외국의 침입을 물리치고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으로 중앙아시아-인도, 동서로 이란-중국 문화가 서로 오고 가는 교차로 역할을 해왔다. 5~8세기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발전한 에프탈 왕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유래했지만 다양한 문명을 아우르는 독특한 불교문화를 꽃피웠다. 이번 호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불교문화의 발전을 이룩한 에프탈 왕국에 대해 살펴본다.



에프탈 왕국 지도

훈족, 즉 흉노의 후예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에프탈

5~8세기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융성한 에프탈 왕국에 관해 주변 여러 나라에서 적지 않은 양의 기록을 남겼다. 동로마, 즉 비잔틴 제국에서는 이들을 에프탈(Ephtalitae) 또는 압텔(Abdel), 아르메니아나 페르시아에서는 헤프탈(Hephtal), 아랍에서는 하이탈(Haytal)로 불렀고, 중국 측 기록에는 엽달(嚙哒) 또는 읍달(悞達)로 표기됐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발굴된 에프탈 시기 주화나 인장을 분석해보면 에프탈인들이 스스로를 에보달로(Ebodalo)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에프탈은 비잔틴이나 페르시아 및 인도 측에서 이들을 ‘하얀 훈(Hun)’으로 지칭한 것으로 보아 훈족, 즉 흉노(匈奴)의 후예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에프탈인들은 오늘날 몽골 서부 알타이(Altai)산맥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북부 텐산(天山)산맥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위서(魏書)’와 같은 중국 역사서에는 고차(高車)나 월지(月氏)의 후예라고 하나 이는 거주지로 미뤄 짐작한 것에 불과하다. 에프탈은 당시 몽골초원을 장악했던 유연(柔然) 제국의 속국이었던가 360년경부터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이후 파미르(Pamir)고원을 넘어 오늘날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지역에 해당하는 바닥산(Badakhshan) 지방으로 이주했다.

에프탈은 월지-쿠산 왕조가 쇠퇴한 이후 박트리아(Bactria), 즉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을 다스리던 키다라(Kidara)라는 집단을 정복하고 파미르-아프가니스탄 북부에 걸친 왕국을 건설했다. 에프탈이 장악한 박트리아 지방에는 기원전 3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 건설된 그리스계 왕국이나 이후 월지-쿠산 제국의 문화가 남아 있었다. 에프탈의 군주는 월지-쿠산 제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야브구

(Yabghu) 또는 간단히 브구(Bbgo)라는 칭호를 취했다. 또한 그리스 문자 체계를 사용하여 국가를 통치했다. 이렇게 국가의 기초를 세운 후 에프탈 왕국은 힌두쿠시 남부 지역과 오늘날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남부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인근 40개국에 에프탈에 복속했다고 한다.

에프탈인들은 아프가니스탄에 정착했지만 중앙아시아 출신인 만큼 유목민의 습속을 유지하고 있었다. 519년 북위의 구법승 송운(宋雲)이 인도로 불경을 얻기 위해 여행을 할 때 목격한 에프탈의 군주는 초원에서 유목 생활을 영위하며 거대한 천막을 궁전 삼아 거주하고 있었다. 에프탈의 유목 군사력은 사산조(Sasan朝) 페르시아에서도 명성이 높았다. 사산조 페르시아의 군주 페루즈(Peruz)는 그의 형제 호르미즈드(Hormizd) 3세와의 갈등 속에서 에프탈의 군사 지원을 받아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키질 석굴 벽화에 묘사된 에프탈 전사

에프탈인들의 유물과 벽화가 현재 아프가니스탄 북부 곳곳에서 발굴되고 있다. 그 가운데 금제 장식품이 눈에 띈다. 구법승 송운 역시 에프탈의 군주가 금으로 만든 4마리의 봉황을 다리로 하는 금보좌에 앉아 있었다고 묘사한다. 벽화에서도 에프탈인들의 외모와 습속이 잘 드러나 있다. 사방으로 비치는 태양의 모양을 본뜬 왕관이나 삼각형 모양의 커다란 옷깃이 오른쪽으로만 열린 독특한 의복 양식은 에프탈 의관의 특징이다. 일부 에프탈인은 붉은 색 머리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묘사된다.

6세기 중반 돌궐 제국의 공격받아 쇠퇴

이러한 강력한 에프탈 왕국은 6세기 중반 몽골초원에서 급성장한 돌궐 제국의 공격을 받아 쇠퇴한다. 역사 기록에는 557년경 돌궐 제국이 사산조 페르시아 측과 함께 에프탈 왕국을 협공하여 괴멸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에프탈 출신 여러 소공국들은 지역 단위로 흩어져 돌궐 혹은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의 종주권을 인정하면서 존속됐다.

이 중 힌두쿠시 산맥 남쪽 지역의 에프탈은 오히려 이전 시기 보지 못했던 문화적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아프가니스탄 중부 바미얀(Bamiyan)에 위치한 거대한 석조불상들을 제작했기 때문이다. 건물 20층 높이를 능가하는 55m 크기의 서쪽 불상과 그보다 작지만 역시 건물 15층 높이에 해당하는 38m 크기의 동쪽 불상은 함께 ‘바미얀 대불’로 잘 알려져 있다. 630년경 이 지역을 방문한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의 저자 현장(玄奘)을 비롯한 많은 구법승들이 바미얀 대불을



1961년 촬영된 바미얀 대불(서쪽) 전경 (출처 위키피디아)

참배하며 인도로의 순례 여정과 무사 귀국을 기원하곤 했다.

한편 바미얀은 대불 말고도 크고 작은 석굴로 유명하다. 이 일대 750여 개의 석굴 가운데 100여 개는 불상이 안치되었던 불당이였다. 그중 약 6곳은 좌우가 넓은 직사각형의 전실(前室)과 동그란 원형의 주실(主室)로 구성되어 있는데, 로마의 판테온(Pantheon)이나 사산조 페르시아의 돔형 건축물의 전통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 특징 이외에도 수평의 단을 따라 감실(龕室)을 만들고 그 안에 보살상을 안치한 점에서 경주의 석굴암과 매우 유사한 점이 지적됐다. 이를 두고 국내 고고미술사학자들은 5~7세기 경 제작된 바미얀 석굴의 아이디어나 조성 기술이 8세기 중엽 신라에 전달되었을 것으로 본다.

물론 바미얀과 석굴암의 차이점도 존재한다. 부조로 불상을 배치한 바미얀 석굴과 달리, 경주 석굴암에

는 원형 주실 중앙에 불상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723년부터 4년간 인도를 순례한 신라의 승려 혜초(慧超)를 비롯한 구법승들이 바미얀의 대불을 참배하고 인근 원형 석굴을 목격하고 돌아와 신라에까지 그 구조를 전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프탈 왕국은 로마와 신라 문화 사이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세기까지 남아 있던 거대 석불 탈레반에 파괴돼

바미얀 석불은 20세기까지 남아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1년 이슬람 과격 세력인 탈레반 측에 의해 파괴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UNESCO)에서는 바미얀 대불을 2003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고, 이후 미국의 지원으로 수립된 아프가니스탄 정부도 바미얀 대불의 복원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미군의 철수와 탈레반 정권의 복귀로 바미얀 대불 복원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에프탈은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해왔지만 힌두쿠시 산맥 곳곳에 남아 불교문화를 꽃피웠다. 이들이 남긴 바미얀 대불은 비록 21세기 탈레반에 의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인들의 기억 속에 위대한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다. 에프탈이 바미얀에 조성한 불교 유산은 신라의 불교 문화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

글 이광태(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일러스트 윤소영(soyoungyun.com)

신보수주의 시대를 연 ‘에이즈(AIDS)’



인류가 출현하고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전염병이 등장했다. 대부분은 의학 기술의 발달로 퇴치됐으나, 아직까지 불치병으로 남아 인류에 위협이 되고 있는 전염병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인 ‘에이즈’다.

에이즈의 기원은 아프리카 중부 콩고 지역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는 원숭이를 사냥해 잡아 먹는 풍습이 있었는데 원숭이를 요리하는 과정에서 원숭이의 바이러스가 직접 인간의 혈액을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질병 전파가 시작됐다.

콩고 지역은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서 오랫동안 에이즈가 외부로 전파되지 않았으나, 20세기에 들어서 비행기의 등장으로 에이즈가 순식간에 외부로 전파되면서 1981년 미국에서 최초로 에이즈 환자가 보고돼 비로소 그 존재가 알려졌다.

에이즈는 주로 성관계를 통해 감염된다. 에이즈에 감염되면, 가장 먼저 몸 이곳저곳에 붉은 색의 반점들이 나타난다. 그러다가 얼굴과 가슴, 성기 부위에 여드름 같은 붉은 돌기들이 솟아나고, 치매와 설사 증세를 보이다가 나중에는 몸의 면역체계가 완전히 망가져 감기 같은 사소한 병에 걸리기만 해도 숨질 수 있다.

히피 문화에 타격을 준 에이즈

1981년을 시작으로 이 에이즈의 위험성과 전파 경로가 알려지자,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미국 사회에서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매우 심했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성관계를 갖는 히피 문화가 크게 유행했는데,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인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의 대부분이 남성 동성애자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히피 문화는 그야말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실제로 유명한 가수인 프레디 머큐리와 할리우드의 슈퍼스타인 록 허드슨은 남성 동성애자들이었고 모두 에이즈에 걸려 사망했다.

그리하여 미국 사회에는 “에이즈는 동성애자들에게 내린 신의 천벌이다”라는 두려움이 널리 퍼져나갔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성관계로 대표되는 히피 문화를 반대하는 엄격한 기독교 문화가 다시 힘을 얻는, 이른바 신보수주의의 시대가 열렸다.

특히 1981년 무렵 미국 대통령이던 레이건은 엄격한 보수주의자로 유명했고, 그래서 국내에 에이즈가 들끓어도 에이즈 환자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다.

에이즈는 성관계 이외에도 혈액을 통해 감염될 수도 있다. 에이즈 환자가 사용한 면도기나 칫솔에는 피를 통해 에이즈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데, 이런 면도기나 칫솔을 사용하는 사람도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또한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 받은 사람도 에이즈에 걸린다. 대표적인 예로 1984년 일본 제약회사인 미도리주지는 약 2천 명의 에이즈 감염자들로 부터 고소를 당했다. 미도리주지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의 피로 혈우병 응고제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 응고제를 사서 복용한 사람들 중 무려 2천 명이 에이즈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미도리주지에서 만든 응고제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도 팔려서 해외에서도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이 500명이나 발생했다.

그 결과 미도리주지의 응고제를 복용해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은 1984년부터 미도리주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였다. 처음에 미도리주지 측에서는 관련 사실들을 부정했고, 당시까지만 해도 에이즈는 성관계에 의해서만 감염된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소송 당사자들이 비난과 야유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9년 동안에 걸친 소송 끝에 마침내 법원은 미도리주지가 만들어 판매했던 응고제가 에이즈를 유발시켰다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미도리주지의 최고 간부 6명은 1996년 2월 에이즈 환자와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고, 그들에게 막대한 피해배상금을 물어주느라 회사가 큰 타격을 입었다. 결국 미도리주지는 1998년 다나베 미쓰비시 제약에 인수되어 사실상 법인 자격이 사라졌다. 🏠

글 도현신 작가

사계절을 내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전망대에서 바라본 식물원 전경



유리온실 내부



야외정원. 꽃을 찾는 나비가 많다.

서울에서 차로 한 시간 반 정도 가을바람을 느끼며 달리다 보면 사계절 내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화성시 우리꽃식물원’이다. ‘화성시 우리꽃식물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온실을 갖춘 자생식물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1천여 종의 식물을 전시하고 있고, 280년 된 해송 소망나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박달나무뿌리, 석림원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또 에너지로 활용되는 식물을 모은 식물자원관, 새롭게 개발된 품종만을 모은 율름관, 사라져가는 우리 꽃과 놀이마당이 있는 싹틈관, 포토존 등 테마별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다. 또, 은행나무길, 숲놀이터와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어 가족, 아이, 연인과 함께 식물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통 한옥 모습을 갖춘 ‘유리온실’

매표소 건물을 지나 식물원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웅장한 모습의 한옥 모양의 유리온실이 한눈에 들어온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통 한옥 형태 유리온실인 사계절관이다. 전통을 살리면서도 이색적인 외관이 눈에 띈

다. ‘사계절관’은 우리나라 5대 명산인 백두산, 한라산, 태백산, 설악산, 지리산을 형상화한 석산과 그 산에 서식하는 식물들로 꾸며졌다. 내부에 들어서니 눈앞에 커다란 바위능선에 산을 축소해놓은 듯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사계절관에서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박달나무뿌리, 살아 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올레미소나무, 용비늘고사리, 나무고사리, 금계국, 노루귀, 꼬리조팝나무, 앵초 등 300여 종의 식물을 관람할 수 있다. 해설사는 “올레미소나무는 2억 년 전 쥐라기 시대부터 생존해온 가장 오래된 상록침엽수종으로 ‘공룡소나무’라 불리며, 화석으로만 존재가 확인되어 지구상에는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1994년 호주 시드니 올레미국립공원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에서 서식하는 희귀나무인 350년 된 ‘구슬꽃나무’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박달나무뿌리, 작은 폭포까지 자연 그대로를 옮겨 놓은 듯한 풍경과 전통 오두막, 향아리, 돌담 등이 있어 친근함을 느끼게 해준다. 몇 걸음 걷다 보니 연인들로 보이는 남녀들이 한곳에 머물면서 사



생태연못

진을 찍고 있었다. 신라시대 멀리 떠난 지아비를 그리워하다 쓰러진 치술령 바위 위에서 박달나무 순이 새로 돌아 천년의 세월이 영커 만들어졌다는 박달나무뿌리였다. 해설사는 “이곳에서 사랑의 언약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어 많은 연인들이 찾는다”고 했다.

빨갭게 물든 가을의 맨드라미

유리온실 관람을 마치고 나오면 넓은 야외정원이 펼쳐진다. 산책로를 따라 계절에 맞는 다양한 꽃들이 심어져 있는데 적작약, 산자고, 돌단풍, 잔대, 대청부채, 삼백초 등 400여 종의 초본류와 동백나무, 진달래, 화살나무, 배롱나무 등 200여 종의 목본류가 식재되어 있다. 부지가 넓고 시야가 탁 트여 있는 잔디화단에서 꽃들을 보며

맨발로 걷는 것으로도 힐링이 된다.

식물원 야외 데크를 따라 걷다 보면 돌미나리, 물부추 등의 습지식물과 부레옥잠, 연꽃 등 다양한 수생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생태연못이 있다. 이곳은 학생들이 생태 관찰과 사생대회 등으로도 많이 찾는 곳으로 시원하게 뿜어내는 물줄기와 함께 동글동글한 초록색 수련이 싱그럽게 느껴진다.

생태연못 옆에는 맨드라미가 군락을 이루며 눈길을 사로잡고 있었다. 해설사는 “만들어 놓은 것 같다라는 순우리말의 이름을 가진 맨드라미는 꽃 모양이 수탉의 붉은 벼처럼 생겼다고 해 ‘닭벼슬꽃’으로 불린다”고 했다. ‘시들지 않는 열정’이라는 꽃말답게 빨갭게 물든 모습에서 열정이 느껴졌다.



빨갭게 물든 맨드라미



숲놀이터

전망대에 올라 자연을 느껴보자

식물원 뒤에는 커다란 나무로 이뤄진 숲 등산로가 만들어져 있다. 등산로를 따라 전망대에 올라가면 식물원과 서해안고속도로를 배경으로 화성의 자연환경을 둘러볼 수 있다.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에는 유전자증식원, 고산식물들이 가득한 암석원과 핑크물리 등 여러 사초류가 식재되어 가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억새원 등이 있는데,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현재 공사 중이다. 아이와 함께라면 우거진 나무숲 사이에 조성된 숲놀이터에서 미끄럼, 짚라인, 자연체험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식물원을 한바퀴 빙 둘러 반대편으로 가면 은행나무길, 약용원, 덩굴원, 잔디광장이 보인다. 약용원은 약용식물인 지느러미엉겅퀴, 당귀, 약모밀, 지황, 쑥, 백선, 낙지다리 등 약 20여 종의 약용식물이 식재되어 약재로 쓰이는 식물들의 모습과 약효에 대해 알 수 있는 주제원이다. 또 덩굴원에는 능소화, 머루, 다래, 으름, 박 등 20여 종의 덩굴식물이 자라고 있다. 양치류원은 물이 흐르는

석림원으로 조성된 주제원에 구실사리, 거미고사리, 청나래고사리 등 50여 종의 양치식물이 식재되어 있다.

식물원에서 가을을 가장 잘 만끽하고 싶다면 은행나무길을 찾아가면 된다. 산책길을 걸으며 여름에는 맥문동 군락, 가을에는 황금빛으로 물든 은행나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이 이 은행나무 터널을 지나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식물원 코스를 마무리한다. 📸

•관람 및 개방시간(매주 월요일 휴원)

09:00~18:00(하절기 3월~10월)

09:00~17:00(동절기 11월~2월)

•입장료

성인 3천 원, 청소년 2천 원, 어린이 1천 원

•안내전화 031-5189-6163

•홈페이지 <https://botanic.hscity.go.kr>

경기 화성 | 글 윤성혜 사진 김진원

권기수의 퓨전 한국화와 ‘동구리’의 시공간



권기수, Gray Forest(회색숲), 〈Dongguri (Gray Forest), 2006〉 캔버스에 아크릴, 162.2x130.3cm

여기 대나무숲과 매화 꽃잎과 동구리라는 아이가 있다. 이 작품 'Gray Forest(회색숲)'는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으로 그린 회화작품이다. 흰색과 회색을 섞은 수직선들과 그 사이에 떠 있는 매화 꽃잎들이 대비를 이루는 그림이다. 오른쪽 아래에 서 있는 만화 캐릭터는 권기수의 분신인 '동구리'라는 아이이다. 이 아이는 20년 가까이 권기수의 그림 속에서 살고 있다. 동구리는 동그란 정원 속에 머리카락과 눈과 코와 입을 그려넣은 만화 캐릭터의 인물이다. 팔과 다리까지 간략한 선묘만으로 이뤄진 캐릭터는 사실 동네 골목길 어디에서 본 듯한 낙서의 한 장면과 유사하다.

작가의 분신 동구리와 함께 다양한 장면 연출

동구리가 유유자적하게 노닐고 있는 대나무·매화 그림은 전통 회화를 변용한 그림이다. 유구한 역사 전통을 이어온 대나무·매화 그림은 매란국죽(梅蘭菊竹)의 사군자(四君子) 전통에서 나왔다. 매화(梅花)·난초(蘭草)·국화(菊花)·대나무로 이뤄지는 사군자 가운데 대나무와 매화는 꽃꽂이 기개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조선시대 선비들에서 구한말 이래 독립 운동가들에 이르기까지 결기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존재해왔다. 따라서 대나무 그림은 엄중한 격을 띠는 그림일 수밖에 없다. 이 엄격함을 깨고 나온 그림이 바로 권기수의 회색숲 그림이다. 전통적인 회화 속에 나타나는 대나무 그림과는 너무나 다른 이 그림은 전통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틀을 넘어서는 파격의 예술이다.

21세기 초반 한국화단에서 동구리는 독특한 시공간을 연출했다. 동구리는 권기수의 문제의식을 담은 분신이다. 지난 20년 동안 권기수는 자신의 그림 속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동구리와 함께 다양한 형식의 상황과 장면들을 연출해왔다. 권기수 예술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전통 회화다. 대학에서 수묵채색화를 전공한 그는 첫 개인전부터 한지에 먹으로 그린 인간 형상을 사각형 액자를 빼고, 인물 자체만 오려서 전시장 벽에 붙이는 파격을 선보였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전통 화단의 엄숙주의가 엄연히 살아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는 첫 출발부터 이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듬해인 2002년 개인전에서 권기수는 동구리 캐릭터를 담은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동양·한국화가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실험의 여정을 열었다.

사군자, 산수와 같은 전통적인 회화 소재들은 자연 속에서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동아시아적 사유와 감성의 세계를 상징한다. 자연을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을 시각 이미지로 대신하는 것이 전근대 시기 그림의 역할들 중의 하나였다. 현대의 회화는 이러한 일차원적인 역할을 넘어서 또다른 방식의 성찰을 모색하는 일종의 게임의 장과도 같다. 전통의 문제를 어떻게 현대로 끌어들이 것인가 하는 의제는 굉장히 심란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동양·한국화라는 학부 편제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모종의 위기의식으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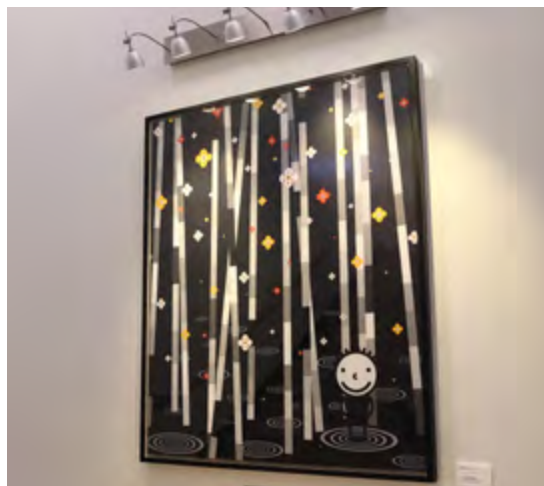
한국 사회 전반이 그러하듯, 학문과 예술 분야에서도 전통 회화나 전통 공예, 국악 등의 전통 예술

이나 역사와 철학, 종교학 등에 걸친 국학 전반이 '근대화=서구화'의 격랑 속에서 수세에 몰려왔던 게 사실이다. 19세기 이래 20세기에 이르는 이러한 상황은 21세기 이후 차차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부끄러운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찬 과거이지만 그 과거를 바탕으로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난 저변의 힘을 재발견하기 시작한 것이다. 동구리가 해낸 일도 그런 것이다. 전통 회화의 요소들을 답습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다 버리고 전지구화에 묻어가기는 더욱 싫은 21세기 초반의 청년예술가가 선택한 퓨전 한국화의 길이 어느새 중견작가 권기수의 반듯한 길을 열어주었다.

권기수라는 한국인 화가의 그림은 서양화냐 동양화냐 하는 식의 낡은 분류법으로는 분간할 수 없는 융합예술이다.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으로 그리는 그림은 혼한, 이른바 서양화로 분류되지만, 요즘은 서양화라는 말 자체를 거의 쓰지 않으므로 그냥 회화라고 부르곤 한다. 동양화라는 말도 요즘은 거의 안 쓰고 한국화라는 말을 쓰는데,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후 먹그림으로 출발했으며, 사군자 등 전통의 소재들을 즐겨 그리는 권기수의 경우 한국화가로 분류할 법도 하지만, 문제는 종이와 먹이 아닌 캔버스에 아크릴채색이라는 재료의 이질성 때문에 '권기수=한국화가'라는 등식도 어색하다. 이럴 경우에는 역시 그냥 회화라고 분류하는 게 맞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예술이 전통의 재해석이나 현대적 변용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권기수의 문제의식이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서구화 추세를 걸어온 한국의 근대성을 근본부터 재검토해 새로운 미의식을 만들겠다는 목적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0년 이상, 한국은 열등한 존재였다. 조선 왕조가 몰락하고 식민지를 겪었으며, 분단과 전쟁, 가난과 독재의 고통을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왔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국난극복의 저력으로 점점 더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키워온 40여 년의 시간동안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 대한 재검토와 재해석이 이뤄져왔다. 예술에 있어서도 전통적 요소들의 동시대적 변용과 차용이라는 예술적 실험과 도전이 이어져왔다. 권기수는 이러한 흐름의 맨 앞에서 있는 예술가다. 🏠

글 김준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사진 김지범



국회 본관 중앙 출입구 1층 계단에 전시된 'Gray Forest(회색숲)'

국회의사당이 남산에?

제21대국회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행정복합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심포지엄, 세미나,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 법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9월 28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됐다. 이참에 국회의사당 이전 내용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지 찾아보았다.

우리 국회가 개원할 때 장소는 중앙청 제1회의실이었다. 그 뒤로도 자체 건물을 갖지 못했고 심지어 6·25 한국전쟁 때는 부산극장, 경남도청 내 무덕전을 전전하다가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임시로 정착한 곳이 태평로 의사당이다.

태평로 의사당은 극히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며 절대면적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건물이 산재해 있어 의정활동은 물론 국회 운영에도 애로가 많아 새롭게 국회의사당을 건립하기로 했다. 국회의사당 건립 후보지로 남산, 종묘, 조선총독부 등 10여 곳이 있었는데 그중 남산으로 정하고 그 곳에 대한 설계를 끝내고 정지공사까지 일부 진행하다가 1961년 5월에 중단됐다.

그러면 왜 남산으로 정했을까? 그 자세한 내용이 제3대국회인 제22회 예산결산위원회 제21차(1956년 12월 17일) 속기록에 나와 있다.

이날은 국회 소관이었는데 최정우 사무총장의 제안설명 후 민영남 의원이 “(축약) 운영위원장이 세계 각국의 의사당을 시찰하고 와서 우리나라도 장차 이렇

게 세워야겠다고 역설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국회의사당 신축에 관한 돈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사무처 요구가 없었는지 재무부가 승인하지 않았는지 경위를 말해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당시 운영위원장이었던 조순 의원이 “(축약) 의사당 위치가 민주주의 중심체이기 때문에 서울 도심지에 있어야 하고 면적은 최소 2만 평이 되어야 해서 처음에 중앙청을 생각했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식민지 시대의 본거지인 중앙청에 민주주의 전당을 지을 수 없다고 하신다. 종묘도 고려했는데 2만 평이 안 된다. 대통령께서 찬성을 안 하신다”고 답변한다. 다음 부분에서 속기록을 그대로 옮겨보면 “대통령께서는 ‘남산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내가 꼭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옳다고 보는 때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의견을 좇을 테야. 내가 꼭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때까지 물색을 해봤는데 남산이 서울 시내의 중심지로 되고 여러 가지로 적당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답변했다.

제21대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또 행정복합도시 완성을 위해 국민의 뜻을 한데 모으고 각종 법령을 정비하는 등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때와는 상황이 너무 다르다.

만약 그때 국회의사당 남산 이전이 실현됐더라면 우리는 지금 남산으로 출퇴근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글 손숙자 의정기록과장



다보탑(왼쪽)과 석가탑

8세기 경주, 그 파격의 상징... 다보탑과 석가탑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多寶塔, 국보 20호)과 석가탑(釋迦塔, 국보 21호). 이 두 탑을 모르는 한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자. 다보탑은 왜 저렇게 특이한 모습일까. 다보탑과 석가탑은 왜 모양이 서로 다를까. 사찰에 쌍탑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두 탑은 동일한 모습인데, 그래서 이름도 ○○사 동탑, ○○사 서

탑이라고 부르는데, 왜 유독 불국사에서만 두 탑이 모양도 다르고 이름도 다른 것인가.

특히 이채로운 것은 다보탑이다. 다보탑은 10원짜리 동전 앞면에 등장한다. 그만큼 매력적이고 또 친숙한 문화재다. 그럼 저 특이한 다보탑은 어떻게 태어난 것인가. 다보탑은 불교 경전 ‘법화경(法華經)’에서 유래한다. 법화경



다보탑 상륜부

에는 다보여래(多寶如來)와 석가여래(釋迦如來)가 등장한다. 다보여래는 과거의 부처(과거불)이고 석가여래는 현재의 부처(현재불)다. 법화경 가운데 ‘견보탑품(見寶塔品)’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평소 다보여래는 “내가 부처가 된 뒤 누군가 법화경을 설법하는 자가 있으면 언제라도 그 앞에 탑 모양으로 솟아나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서원(誓願)했다. 다보여래는 훗날 석가모니가 법화경의 진리를 설파하자 정말로 그 앞에 화려한 탑으로 불쑥 솟아났다. 그 탑의 높이는 500유순(由旬)이요, 평면의 넓이는 250유순이다. 온갖 보물과 5천 개의 난순(欄循, 난간), 천만 개의 감실(龕室)로 장식되어 무척이나 화려했다. 옆으로 깃발이 나부끼고 줄줄이 구슬이 늘어져 있고, 보배로운 방울들이 달려 있다. 또한 사방으로 아름다운 향이 가득 풍겼다.

재미있는 내용이다. 법화경 견보탑품에 따르면 석가탑

은 현재의 부처인 석가여래가 설법하는 내용을 표현한 탑이고 다보탑은 과거의 부처인 다보여래가 불법을 증명하는 것을 상징하는 탑이다. 다보탑은 따라서 다보여래가 머무는 환상적인 궁전인 셈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불국사의 다보탑·석가탑이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아니 불경의 내용을 탑으로 만들어 내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보탑이 특히 더 두드러진다. 기단부의 계단과 난간(현재는 난간의 기둥만 남아 있음), 네 마리의 사자상, 4각과 8각의 난간 장식, 연꽃잎과 그걸 받치는 대나무 줄기 모양의 기둥, 뒤집힌 신발 모양의 기둥…. 일반적인 석탑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로운 장식을 넣어 화려하게 꾸몄다. 모두 법화경의 내용을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국내의 전통 석탑 가운데 이렇게 특이하고 화려한 탑이 또 어디 있을까. 이런 모양의 탑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다. 경전의 내용을 탑으로 표현한 적도



다보탑 탑신 난간

없다. 게다가 사찰에 쌍탑을 배치하면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탑을 조성한 것은 불교 건축의 기존 틀을 벗어난 것이다. 아무리 불경의 내용을 시각화한 것이라고 해도, 다보탑의 모습은 파격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이런 파격이 가능했을까.

신라인들의 자신감과 간절함의 표현

불국사와 다보탑·석가탑을 조성한 시기는 8세기 중반, 당시 신라의 수도 경주는 삼국통일의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했다. 신라인들은 또 불국토를 꿈꾸었다. 그들이 창건한 불국사는 그러한 시대상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신라인들은 불국사를 조성하며 법화경의 내용을 충실하게, 그리고 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석탑 양식을 과감히 깨뜨리고 이제껏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형태를 도입했다.

그들은 자신감이 있었다. 삼국을 통일했다는 자신감. 그리고 간절함이 있었다. 불국토를 완성하겠다는 간절함. 그 자신감과 간절함으로 신라인들은 경전에만 있는 것, 실제로 볼 수 없는 것, 마음에만 있던 것을 눈앞에 실물로 펼쳐 보이곤 했다. 그건 과감하고 창의적인 시

도였으며 그 결과물이 바로 다보탑과 석가탑이었다.

그렇게 탄생한 다보탑과 석가탑은 아직도 신라의 상징이고 경주의 대표 문화재다. 그런데 야외에 노출된 상태로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런저런 훼손이 생겨 전체적으로 탑이 불안정하고 지지력이 약해졌다.

다보탑은 2008~2009년 부분 해체를 하고 수리를 했다. 상륜부와 4각형, 8각형의 난간이 있는 상층부를 해체한 뒤 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1925년 일제에 의한 해체 수리 이후 83년 만의 해체 보수였다. 석가탑은 모니터링이 진행되는 중 2010년 12월 기단석(동쪽 상층기단 갑석)에서 길이 1.32m, 최대 폭 5mm의 균열이 확인됐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12년 전면 해체 수리에 들어가 2014년 말 보수 공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1966년 사리장엄구를 노린 도굴 사건으로 탑의 일부가 훼손돼 부분 해체 수리한 이후 46년 만의 일이었다. 해체 보수 작업을 진행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공사 기간 내내 다보탑·석가탑 주변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해 현장을 일반에 공개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문화재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1천200여 년 전 파격적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다보탑과 석가탑. 오랜 세월 온갖 풍상을 이겨내며 오늘에 이르렀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져본다. 다보탑은 과연 몇 층인가. 2층, 3층, 4층? 다양한 설이 있지만 아직 명쾌한 답은 없다. 일반적인 탑과 모양이 너무 다르다 보니 층수를 헤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보탑은 2층 탑, 3층 탑, 4층 탑이 될 수 있다. 무급(無級)의 탑, 즉 층이 없는 탑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다보탑이 과연 몇 층인지, 영영 그 답을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렇게 매력적인 석탑 앞에서 몇 층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다보탑·석가탑을 만든 신라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글·사진 이광표(서원대 문화유산학 교수)

국회 간행물 표준 디자인 개발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회사무처
LEGISLATION SECRETARIAT



국회예산정책처
LEGISLATION BUDGET POLICY CENTER



국회입법조사처
LEGISLATION RESEARCH SERVICE



국회 간행물 표지 디자인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국회도서관
LEGISLATION LIBRARY



국회미래연구원
LEGISLATION FUTURE RESEARCH CENTER



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강원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이효석 문학관'

가을보다 아름다운 문장,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문학기행

이 가을 봉평에 가면 먼저 한잔해야 한다.
들판에, 산비탈 골짜기에, 마을마다 온통 흐드러지게 피어난
메밀꽃, 그 '꽃사태'를 어찌 감당하겠는가! 그 품에서 태어난
작가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은 차라리 한 편의 시다.
봉평에서 그 작품을 스무 번 넘게 읽었다. 눈물이 났다.
이 가을 봉평에서 감당해야 할 것은 '메밀꽃 필 무렵'의
문장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



꽃이 피었다. 산 아래 들판에, 골짜기 산비탈에, 낡은 집 앞 마을 빈 터에, 온통 하얀 메밀꽃이다. 낱알갱이 같은 작은 꽃들이 무슨 사태처럼 쏟아져 마을 전체가 흐드러졌다.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 중에서-

어린 이효석의 마음에도 각인된 풍경이었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이효석은 이 동네에서 태어나 흐드러진 메밀밭 꽃무리 속에서 자랐다. 그가 30세 되던 해인 1936년에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메밀꽃 필 무렵'이 세상에 소개됐는데, 소설 전체의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소재로 메밀꽃을 선택한 것은 어린 시절 자신도 모르게 그의 마음속에 각인된 고향의 정취 때문이었으리라.

이효석은 1907년 지금의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681에서 태어났다(이 집은 현재 다른 사람의 소유다). 이효석은 이곳에서 태어나서 4세까지 살았다. 그 이후 교편을 잡고 있던 부친이 서울로 전근하는 바람에 가족 모두 서울로 이사를 간다. 하지만 2년 뒤 봉평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때부터 이효석은 서당을 다녔다. 그리고 8세부터 평창보통학교를 다니면서 평창에서 하숙을 했었는데, 이때 이효석은 고향 품이 그리울 때면 평창에서 봉평 집까지 100리 길을 걸어서 다녔다고 한다. 초등학교 시절 내내 최상위권 성적이던 이효석은 1920년 서울에 있는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현 경기고)에 입학하게 된다. 그러니까 창동리에 있는 생가에서 태어나서 14세가 될 때까지 산 셈이 되는데, 이 때 형성된 고향 풍경에 대한 정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작품이 '메밀꽃 필 무렵'이다.

'메밀꽃 필 무렵'을 따라 가는 길

봉평 5일장은 매 2일과 7일에 선다. 장날을 맞춰 찾은 봉평장은 예나 지금이나 왁자지껄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장이 설 때마다 메밀국수가 끊이지 않



이효석 문학관 내부 모습



이효석 문학관 전망대에서 본 메밀꽃밭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효석달빛언덕에 재현한 이효석 생가. 원래 생가는 이곳에서 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

았다는 장터 사람들의 말처럼 예전부터 메밀밭이 많았다. 그렇게 메밀은 봉평 사람들의 생활과 하나였으며, 메밀꽃이 한창인 9월이면 메밀꽃밭이 마을 사람들의 인심처럼 훈훈하다.

소설 속 이야기는 봉평장이 끝날 무렵 해거름에 주인공인 허생원과 조선달이 짐을 챙기고 충주집으로 향하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장터 주막인 충주집에는 이미 대낮부터 술에 취한 젊은 장돌뱅이 동이와 주모가 수작을 부리고 있었으며, 그 꼴을 보다 못한 허생원은 동이에게 손찌검을 하며 쫓아낸다. 그렇게 엮힌 허생원과 동이, 그리고 조선달은 충주집을 나와 대화장으로 가기 위해 밤길을 재촉한다.

그들이 술을 먹었던 충주집 자리에는 '충주집 터'라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소설에서 그들은 충주집에서 나

와 대화장으로 발길을 옮기는데, 세 사람이 넘었던 노루목재는 지금의 백옥포리 마을회관 뒷산이다. 소설 속에서 '고개 너머는 바로 개울이었다'고 말한 곳은 봉평에서 장평을 넘나드는 노루목재와 그 아래 흐르는 속사천 어디께다. 소설에서는 여울목을 건너는 널다리가 장마에 유실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냇물을 건너는 것으로 그려진다. 허생원이 미끄러져 물에 넘어지는 장면의 배경이다.

효석달빛언덕

소설 속에서 젊은 시절 허생원과 성서방네 처녀가 하룻밤 정을 나눈 물레방앗간은 봉평 면소재지를 흐르는 흥정천 다리 서쪽에 있었다. 물레방앗간을 지나 '이효석 문학관'에 도착했다. 문학관 전시실로 들어가기 전에 전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 나오는 충주집이 있던 곳



효석달빛언덕에 있는 푸른집

망대에서 봉평의 풍경을 한눈에 넣었다. 흥정천과 메밀꽃밭, 봉평장이 있는 면소재지가 파란 하늘 아래 정겹다.

이효석 문학관에서 그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았다. 이효석이 원고지 위에 직접 쓴 육필원고와 집필실을 그대로 복원한 것에서 생전의 모습을 느껴본다. 이효석의 유품과 초간본 책, 이효석과 관련된 잡지, 신문 등도 볼 수 있다. 왠지 낯익은 봉평장 모습을 재현한 미니어처에서 충주집을 보았다. 허생원과 동이의 일화가 실제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이효석 문학관을 나와 이효석 생가로 향했다. 이효석이 태어나고 자란 생가는 현재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681'인데, 오래 전에 이효석의 집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다. 생가로 가는 길목에 '효석달빛언덕'이 먼저 나왔다. 이효석의 이야기는 그곳에서 계속된다. 고증을 통해 생가를 초가로 재현했다. 이효석이 평양시 창전리에 살 때 거주했던 집을 재현한 건물도 있다. 삼십 평이 넘는 뜰에 벽돌로 지은 집이었다. 담쟁이가 집 전체를 감싸

고 있었다. 푸른 담쟁이 앞으로 뒤덮여서 '푸른집'으로 불렸다. 이효석의 장편소설 '화분'의 무대였으며, 이 집에서 '메밀꽃 필 무렵'을 집필했다.

돌아 나오는 길, 생가로 가는 예전 길을 막아놓았다. 옛날에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었다. 흐드러지게 핀 메밀꽃밭과 낡은 집 한 채가 어울렸다. '메밀꽃 필 무렵'에 나오는 풍경이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일 지경이다'라고 표현한 소설 속 메밀꽃밭의 전형이다. 다만 달빛만 없을 뿐이었다.

벌써 몇 번의 가을을 이곳에서 맞이했는가. 비 끝에 성큼 다가선 가을, 그림자가 메밀꽃밭 옆 좁은 길까지 따라 온다. 곧추섰던 해가 기울고 산 그림자가 강을 덮기 시작했다. 이제 '달이 뜨렸다.' 🌕

* 글에 소개한 소설 속 문장은 1994년 을유문화사에서 발간한 '메밀꽃 필 무렵'에서 따옴.

글·사진 장태동(여행작가)

의미나 대상이 같을 때는 용어도 같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학성이 요구되는 글에서는 의미가 같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용어를 달리 써서 의미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가 같은 새 말을 만들어내는 기교를 부리기도 한다. 그런데 공문서는 문학성이 요구되는 글이 아니다. 의미나 대상은 같은데 용어가 다르면 혼란이 생길 뿐이다. 일반인이 모르는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실제로 대다수 일반인은 ‘노인’과 ‘고령자’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고, 고용노동부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한다.

우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 중 출생신고서 뒷면의 작성방법을 보면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 짧은 표현에 쓰인 ‘전혼’과 ‘직전 혼인’, ‘해소 후’와 ‘종료 후’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 차이가 있을까? 의미상 ‘이혼한 후’를 뜻하는 말 같은데 왜 용어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면 그 차이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의미가 같거나 비슷하다면 같은 용어를 쓰려고 노력해야 한다.

- (1) 태백시 및 도 공직자, 법무부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한다. (중략) 교도관 등 법무부 직원 450명이 상주할 예정이다. (강원도청, 2021. 8. 24. 보도자료)
- (2) 꽃 피는 시기는 2월 하순이며, 개화 지속 기간은 30일 내외로 다른 품종에 비해 길게 유지되는 품종이다. (충북도청, 2021. 8. 26. 보도자료)

예문 (1)을 보면 강원도와 태백시 소속 공무원이 ‘공직자’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은 ‘관계자’와 ‘직원’으로 표현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구분하려고 그런 것은 아닐 텐데, 왜 그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했는지 의도를 짐작하기 어렵다. ‘태백시와 강원도, 법무부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린다’라고 해도 충분한데 말이다. 예문 (2)에서는 ‘꽃 피는’이라는 고유어와 ‘개화’라는 한자어를 함께 썼는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의식적인 표현으로 보이지 않는다.

- (3)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노안 등으로 시력이 약해진 고령자 (중략) 휠체어 탄 사용자 (중략) (행정안전부, 2020. 11. 9. 보도자료)
- (4)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지원과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을 위해 부처간 정책 연계를 제고하고 현장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 2021. 8. 23. 보도자료)

그런가 하면 예문 (3)의 앞에서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뒤로 가면 ‘휠체어 탄 사용자’라는 말이 등장한다. 이 둘은 같은 대상일까? 얼핏 생각하면 같은 대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자는 장애인이 아니라 다리를 다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예문 (4)를 보면 ‘위기청소년’과 ‘사각지대 청소년’을 마치 다른 대상처럼 표현하고 있다. 주어진 문맥만으로 둘의 차이를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 같은 듯 다른 대상이라는 느낌이 든다. 🍵

글 김형주(상명대 국어문화원 특임교수)

제21대국회 두번째 정기국회 개회, 박병석 국회의장, 오스트리아 공식방문

8월 31일

- 국회, 국회부의장과 10개 상임위원장 선출

9월 1일

-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

9월 3일

-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발전시키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달라”며 협치를 당부

9월 4일

- 박병석 국회의장,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박 7일간 오스트리아 공식 방문

9월 7일

- 김부겸 국무총리, 서울, 인천 등 전국 5개 도시철도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각자의 입장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하철은 ‘지친 서민의 발’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밝혀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위중증 환자 위주 관리와 방역지침 완화를 뜻하는 일명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을 10월 말로 예측한다고 밝혀

9월 8일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국회의원직 사퇴 선언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위드코로나특위’ 신설을 제안

9월 13일

- 국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직 사직안 의결
- 정세균 전 국무총리, 대선 경선 후보직에서 중도사퇴

9월 14일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021년 국정감사계획서 의결

9월 15일

- 국회,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직 사직안 의결
-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결과보고서 및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 채택

9월 17일

- 박병석 국회의장, 추석을 앞두고 국군의무사령부 방문해 장병들 격려

9월 22일

-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추진 제안

9월 24일

- 김부겸 국무총리, 추석 연휴 직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를 돌파한 것에 대해 “개인 모임 자제” 등 요청
- 김영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의한 종전선언에 대해 “관계회복 논의할 용의 있다”고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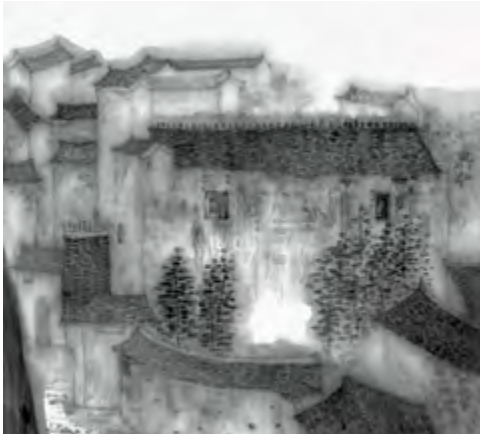
9월 26일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선경선 후보직 중도사퇴하고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 선언

9월 28일

- 국회, 본회의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법안 39건 의결

정리 윤성혜



국회 ART GALLERY 10월 작품전

2021 한중문화교류의 해 기념전

2021. 10. 5. - 10. 28.

-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
- 전시품 〈徽宅 水墨(중국 안휘성 전통주택)〉 등 회화 43점, 조각 7점
- 작가 차홍규 외 49인
- 추천 서정숙 의원실
- 문의 국회사무처 참관전시담당관실 02-6788-4394

<편집후기>

어느덧 한가위를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러 가고 있습니다. 매년 정가국회 속에서 정신없이 지내다가 가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짧은 가을을 탓하지 않기 위해 마음을 강하게 먹어 봅니다.

- 유상조 국회의정연수원장

추석연휴 때문에 빠듯했던 제작일정을 무사히 맞춘 것에 안도하며 10월호를 마무리했습니다. 결실의 계절, 국회보도 보다 알찬 결실을 위해 더 고민하고 더 뛰겠습니다.

- 김현아

코로나19로 화훼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꽃 한송이와 화분 몇 개만으로도 '플랜테리어'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꽃을 사서, 소소하고 일상적인 꽃 문화가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고영선

이번달 특집은 '플랫폼 산업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정책 방향'을 다뤘습니다. 평소 편하게 이용했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마감을 끝내고 나니 국정감사의 달 10월이 성큼 다가왔네요.

- 박민선

취재를 위해 방문했던 식물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한산했습니다. 왠지 허전한 마음도 들고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마음 놓고 "꽃바람이나 쐬려갈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날이 간절해집니다.

- 윤성혜

대한민국 의정 종합뉴스

6시 & 뉴스N

빠르고 정확한 정치뉴스

예리한 이슈 분석

속 시원한 현안 토론



앵커
신동진

앵커
강아랑

월~금 저녁 6시 방송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